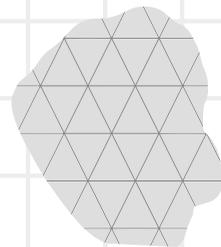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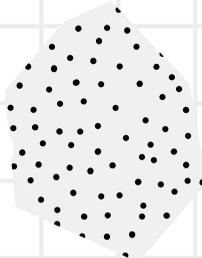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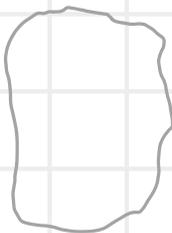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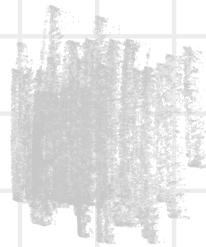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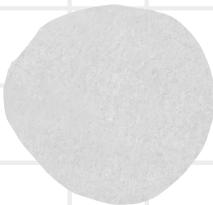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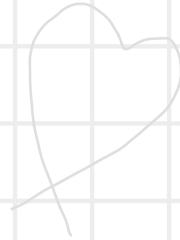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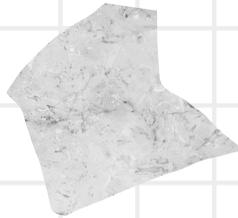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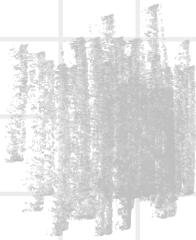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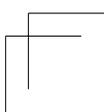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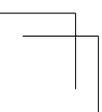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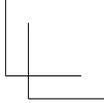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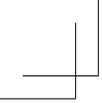


청년이 만드는 도시, 청년이 살아갈 도시

# 부산 청년 리포트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역음





청년이 만드는 도시, 청년이 살아갈 도시

# 부산 청년 리포트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역음

6..... 들어가며



## 1부: 청년의 경험이 정책이 될 때

12 ..... 청년  
16 ..... 참여  
23 ..... 경험  
27 ..... 정책  
30 ..... 원래  
34 ..... 불만  
38 ..... 공정  
42 ..... 홍보

## 2부: 도시의 빈틈을 메우는 약속



48 ..... 도시  
51 ..... 진심  
54 ..... 빈틈  
57 ..... 지역  
60 ..... 약속  
63 ..... 미션  
66 ..... 증명  
69 ..... 다음



### 3부: InterView 청년활동가를 만나다

74.....치치

84.....구름

92.....황성재

100.....빛을 이루다

108.....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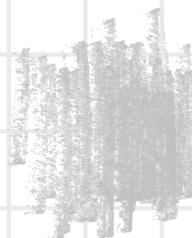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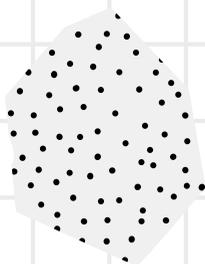
116.....창웅

122.....야르

130.....조아

138.....우왕

146.....서원



## 들어가며

도시는 늘 ‘계획’과 ‘정책’으로 채워진다. 개발계획, 전략산업, 인구 정책, 도시재생, 그리고 청년정책. 행정이 시민을 향해 꺼내는 언어는 대체로 딱딱하고 추상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조금 다르다. 우리는 계획이 아니라 생활로 도시를 채운다. 우리에게 도시란 추상적인 계획의 캔버스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과 비용, 관계와 마음 상태가 얽힌 생활의 연속이다.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이 지난 10년간 해온 일은 어쩌면 이 두 언어 사이를 오가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생활의 언어로 느낀 것을 정책의 언어로 옮기고, 다시 그 정책이 누군가의 생활에 닿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다. 사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고되고, 활동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상적인 그 어딘가에서 그동안 꺼내지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지난 10년간 청년정책이 풍부해졌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흩어져 있다. 이 반복 속에서 소진되는 것은 예산만이 아니다. 도시에 공동체에 대한 신뢰, 변화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닳아간다. 10년을 활동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피로감이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록은 반복을 멈추게 하는 장치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언어로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그 합의가 실제 정책과 예산, 현장 운영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디가 끊겼는지까지 남기는 일이다. 기록이

있어야 '사례'가 근거가 된다. 기록이 있어야 청년 거버넌스가 행사장의 사진을 넘어 도시 운영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통과한 10년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실패인지 완료인지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답'보다 '경로'다. 부산에서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와 접속해 왔는지, 제도와 사업이 어떻게 열리고 달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고 버티고 재구성되었는지.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시도했으며, 무엇을 고민하는지 남기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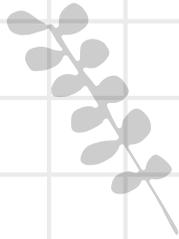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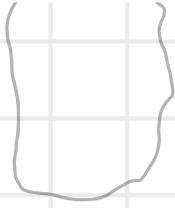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청년 영역에서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늘 애매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10년을 보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해졌다. 활동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조건을 스스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것. 낯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일, 공간을 만드는 일,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일, 목소리를 내는 일이 모두 '내 삶이 이 도시에서 가능한가'를 묻고 그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 시도 전체가 우리가 정의하는 청년활동이었다.

독자가 여기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기 바란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먼저 16개의 토픽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현상을 정리했다. 함께 고민한 내용이기에 저자명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토픽들이 하나의 토론 주제가 되어 또 다른 공론장이 열리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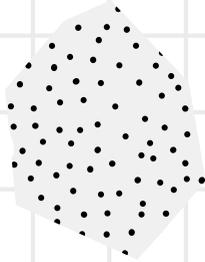
16개의 토픽에 이어 청년활동가 10명의 인터뷰를 담았다. 청년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활동가가 고민하는 삶의 다음 과업은 무엇인지. 이들의 대화를 통해 모호한 청년활동의 개념을 각자의 방식으로 상상해보길 바란다. 기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지난 10년을 정리하며, 다음 10년을 궁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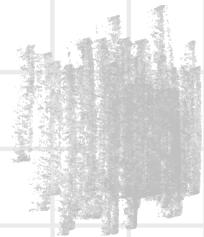
# 1부

## 청년의 경험이 정책이 될 때



청년  
참여  
경험  
정책

원래  
불만  
공정  
홍보



## 청년

2021년 5월 26일, 부산시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산학창업국’을 신설하고, 그 하위 과제로 ‘청년정책’을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산학창업국이라는 명칭 그대로, 제1과제가 청년정책이 아니라 ‘대학 및 산학협력’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상징적이었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던 시점이었기에, 왜 다시 퇴행하는 선택을 하려는지 당혹감과 답답함이 먼저 앞섰다.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념적 틀’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감각이 또렷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입법예고가 올라온 바로 다음 날, 주변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통적으로 나온 말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였다.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문제가 청년 문제 전체를 대표하거나 그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했다.

특히 이 논의가 품고 있는 공백이 뚜렷했다. 산학·창업의 범주로 포섭되지 않는 삶, 곧 다른 방식의 삶을 꿈꾸는 동료들의 경로는 어디에 놓이는가. 누군가는 “실무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산학창업

국 산하에서 대학·산학협력 다음에 청년정책이 위치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우려한 것은 ‘조직도상의 위치’만이 아니었다. ‘대학·산학협력·창업’이라는 프레임이 부산 청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유일한 현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해석이 곧 정책의 언어와 우선순위를 규정해버릴 수 있다는 점이였다.

그동안 청년들이 전달해온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일관되다. 청년을 숫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로 마주해달라는 것,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 창업 정책, 산학협력 정책이 각각 독자 영역으로 존재하듯, 청년정책 또한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주로 서야 한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창업·산학협력 정책 중 하나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독자적 위상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다. 또한 청년정책의 주요 파트너는 산업이 아니라 ‘청년’이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2023년 5월 30일 시의회 입법예고와 6월 1일 부산시 발표를 거쳐,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34세 이하’에서 ‘18세~39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제시된 근거는 “전국 지자체 중 청년기본조례 상한이 34세인 곳이 부산을 포함해 세 곳뿐”이라는 비교, “들쭉날쭉한 청년정책 대상 기준의 통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청년인구 유출 방지” 같은 논리였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어야 할 질문, 즉 “청년이 누구인지”,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라는 문제 인식은 뒷전으로 밀렸고, 지역 간·연령 간 비교가 사실상 유일한 설명으로 기능했다.

물론 청년들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년 연령 막바지에 있는 당사자들은 “내년이면 청년이 아니게 되어 지원이 끊긴다”는 불안을 말해왔다. 이는 청년정책이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연속지원 요구는 정책의 문제해결력을 점검하라는 요청에 가까웠지만, 실제 논의는 대상과 문제 진단, 해결 방식의 정교화로 이어지기보다 ‘몸집을 키우는 방식’의 연령 확대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대상이 39세까지 확대되면서 부산의 청년 인구는 2023년 기준 634,168명에서 819,629명으로 약 20만 명 늘었다. 예산도 전년 대비 88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대상 확대에 맞춰 예산이 함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달랐다. 증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교육 분야의 LINC3, RIS, 글로벌 대학30 육성지원 등 대학지원사업에 따른 국비 확대에서 비롯되었고, 일자리·참여권리·복지문화 영역의 시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었다. 늘어난 대상을 고려하면, 청년정책은 사실상 ‘확대’가 아니라 ‘축소’에 가까워진 셈이다. 신규로 유입된 34~39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정책 또한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구조는 곧 ‘경쟁률’이라는 형태로 체감되었다. 부산형 기쁨두배통장 모집 결과, 4,000명 모집에 61,96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5.5대 1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3.4배 증가한 수치였다. 연령 확대로 대상이 늘어난 데 더해 소득 및 근로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정작 지원의 총량

과 설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였다.

연령 상향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늘어난 연령대에 걸맞은 정책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사회로의 이행기에서 이탈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취지로 설계된 정책일수록 3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효과가 미비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 범위를 늘렸다면 그들이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대상 확대가 의미를 가지려면, ‘연령의 확장’이 아니라 ‘문제의 정의와 해법의 확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 참여

청년 거버넌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당사자성’이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설계돼 왔다. 그래서 여러 제도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청년이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다.

청년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청년정책이 지금의 형태로 확장되기 까지 실제로 청년 당사자들이 해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사회는 청년 문제를 실업 문제로만 정의했고, 청년정책은 곧 일자리정책으로 환원되곤 했다. 그러나 ‘이행기’라는 현실—학교를 나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 주거와 생계의 불안정,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공론화한 주체는 결국 당사자들이었다. 그들의 경험과 언어가 있었기에 청년의 어려움이 “개인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사회가 메우지 못한 공백”으로 다시 읽힐 수 있었고, 정책도 일자리 중심에서 삶 전반을 다루는 이행기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참여기구’는 단순한 참여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형성과정 자체를 구성하는 정책모델로 강조돼 왔다. 문제를 겪는 당사자가 정책 과정에 들어와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

는 구조가 청년정책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고,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그 모델은 광역을 넘어 기초지자체까지 빠르게 확대되었다.

현재 청년참여기구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지역마다 활동기간이나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은 공통적으로 수행한다. 부산만 보더라도 광역단위의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고,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각 구·군의 구성 방식과 활동 주기는 상이하지만, “정책 제안을 한다”는 기능만큼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매년 축적되는 제안과 그에 대한 행정의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많은 제안이 ‘청년정책’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갇힌 형태로만 다뤄지기 쉽다. 청년이 실제로 겪는 문제는 주거, 노동, 돌봄, 건강, 이동권, 문화, 안전 등 도시 정책 전반과 얽혀 있는데, 제안이 행정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청년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만 남는 경향이 생긴다. 그 결과, 내년에 당장 넣을 수 있는 소규모·단기 과제 위주로 정리되거나, 애초에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는 제안은 검토 대상에서 멀어지기 쉽다.

또 하나의 간극은 피드백의 부재다. 제안이 접수된 이후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왜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았는지, 무엇이 보완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의 공식적인 답변은 매우 드문 경우가 많다. 참여기구의 활동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

되고, 그 이후는 다시 행정 내부로 봉인된다. 이때 참여는 실질적 의사 결정 과정이라기보다, 절차적 참여-형식을 갖추기 위한 참여-로 축소될 위험이 커진다.

재정적 기반 역시 취약하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의 운영, 자료 생산, 공론장 구성, 숙의 과정 설계 등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예산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 활동은 ‘자원봉사형 참여’로 밀리고, 지속성은 떨어지며, 참여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사자성은 강조되지만, 그 당사자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건은 따라오지 않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초기 참여기구의 취지였던 “너른 참여”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더 많은 청년이 들어와 다양한 경험을 정책 언어로 바꾸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모집 인원이 줄고, 심사 단계가 강화되면서 문턱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참여의 ‘대표성’이 아니라 ‘스펙화된 참여자’가 선발되는 방식이 굳어지면, 참여기구는 점점 소수의 익숙한 사람들로 고정되고, 정책의 당사자성이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 연도   | 선정방법   | 모집분과   | 인원<br>(명) | 예산<br>(백만원) |
|------|--|--|-----------|-------------|
| 2017 | 신청자 중 100명 추첨<br>오픈파티 참여자 우선<br>선정,                | 모집당시 구분 없음.<br>활동을 통해 8개 분과구성<br>내일의 내일(일자리), 기본소득, 주거<br>자립, 청년활동, 보건, 공동체, 교육,<br>도시 | 62        | -           |
| 2018 | -  | -  |           | -           |
| 2019 | 신청자 중 발대식 참여<br>자 전원                               |  | 116       | 10          |
| 2020 |  | 모집당시 구분 없음.<br>참여자의 제안을 통해<br>22개 분과 구성  |           | 50          |
| 2021 | 신청 후 첫만남 워크숍<br>에 참여한 청년 전체                        | 10개<br>건강, 교육, 공동체, 청년활동, 주거,<br>일자리, 도시환경, 생활안정, 다양성,<br>기타                           | 239       | 93          |
| 2022 |  | 8개<br>노동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사회안전<br>망, 기후환경, 교육, 참여, 평등인권                                   | 189       | 95          |
| 2023 | 사전신청후, 기본교육<br>이수 또는 발대식참여자                        | 7개<br>기후환경, 문화예술, 노동일자리, 주<br>거, 평등인권, 사회안전망, 모니터링                                     | 155       | 60          |
| 2024 | 신규참가자 우선, 선착<br>순 접수                               | 5개<br>일자리창업, 주거, 문화복지, 교육, 홍<br>보참여  | 75        | 60          |
| 2025 | 제출서류 심사<br>활동신청서의 내용적합<br>성, 충실성 등 신청자 참<br>여의지 확인 | 5개<br>일자리창업, 주거, 문화복지, 교육, 정<br>책홍보  | 75        | 60          |

결국 지금의 청년 거버넌스는 “참여가 있다”는 형식은 갖췄지만, 그 참여가 실제로 정책을 바꾸는 경로로 작동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취약해진다. 당사자성을 말하면서도 당사자의 제안이 반영되는 구조, 피드백이 순환되는 구조, 그리고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예산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청년 거버넌스는 쉽게 ‘절차’로 남고 ‘정치’로 이어지지 못한다. 형식과 실질 사이의 간극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참여기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정책제안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축소되는 장면은 청년 거버넌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평가는 종종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놓는다. 기본적인 참여 교육이나 정책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참여자는 무엇을 어떻게 제안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행정 시스템의 언어와 형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역량을 키우는 기반 없이 “성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규모를 줄이면, 참여는 더 약해지고 결과물은 더 빈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참여의 질을 ‘평가’하기 전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먼저 묻는 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25년 부산시 청년정책의 ‘참여권리’ 분야 대표과제로 제시된 <청년 생활인구 유입활성화>는 상징적으로 읽힌다. 청년정책에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부산에 숙박 예정인 타지역 청년에게 생활인구 청년증을 발급하고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체류 콘텐츠를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정책의 대상이 ‘부산의 청년’에서 ‘부산에

잠시 머무는 청년'으로 이동한다. 참여권리 영역에서조차 “정책에 참여할 권리”보다 “정책을 통해 유입될 인구”가 강조되는 구성이다. 청년 거버넌스가 ‘당사자 참여’라는 원래 취지에서 출발했음을 떠올리면, 참여권리가 어느 순간 도시 마케팅과 체류 전략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생긴다.

현장의 체감은 더 분명하다. 청년정책네트워크나 협의체가 운영되더라도 실제 참여가 ‘의견 수렴’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설문에 응답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만, 그 이후의 정책 결정 과정—우선순위 설정, 예산 배분, 부서 간 조정, 실행 설계—에 주도적으로 들어갈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참여가 “말할 기회”로만 남고 “결정할 권한”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거버넌스는 형식은 갖추되 실질은 비어 있는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만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핵심은 ‘참여 보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정이 청년을 유의미한 정책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선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것은 곧 참여를 위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절차의 설계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참여가 지속되려면 회의 몇 번으로는 부족하고, 학습과 숙의, 자료 접근, 피드백과 환류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참여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이 어떤 법·계획·예산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지, 올해의 재

정 여력과 제약이 무엇인지,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같은 ‘전제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제안이 공중에 뜨지 않는다. 둘째, 제안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채택 여부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검토 기준과 논의 경로, 보완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지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제안이 누적되고, 참여가 학습을 낳는다. 셋째,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소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안-검토-조정-결정-실행-평가의 각 단계에서 참여자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 가능한지 ‘참여의 지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결국 참여의 질은 참여자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행정이 제공하는 조건—정보, 시간, 예산, 피드백, 결정 과정의 접근성—이 참여의 질을 결정한다. 청년 거버넌스를 “아이디어 생산 장치”로만 평가하고 성과가 약하다고 축소하기보다, 참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반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 거버넌스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넘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

사회적 안정망, 불평등 해소 같은 거대한 의제가 우리의 화두로 자리 잡기 전. 20대 초중반의 우리는 ‘활동가’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꽤 매력적으로 보였다.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않고, 그것이 사회문제임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 문제의 원인을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가능한 해법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제도 속에 밀어 넣기 위해 필요한 주체들을 찾아가 협력의 경로를 설계해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번거롭고 느리고, 때로는 낯설고 귀찮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참여를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감각이 있었다. 시민으로서의 감각은 “내가 시민인데!”라고 외친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결국 참여라는 경험이 조금씩 쌓이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게 됐다.

2021년, 청년참여기구인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참여자가 남긴 말이 오래 남아 있다. “청정넷은 말 그대로 풀뿌리 연결망이죠. 청년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지지받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곱씹을수록 ‘먹고 사는 일’만큼이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개인이 혼자 버티는 삶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사회를 함께 이해하고 해석하고, 공동의 언어를 만들고,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보는 경험이야말로 참여가 가진 본질이라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도 청년참여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관련 위원회에서 청년위원 할당을 의무화하는 흐름도 계속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참여의 장이 넓어지는 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다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현실은 고민을 남긴다. 참여라는 건 결국 경험재라서, 매년의 시행착오와 누적된 학습을 통해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도 청년도 참여기구 운영과 활동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제도화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낮은 이해도와 부족한 예산 속에서 ‘참여가 작동하는 원리’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생겨났다. 목적이었던 가치—당사자가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책임 있게 성장해가는 과정—은 희미해지고, 형식과 절차만 남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보면 완전히 비관할 수만은 없다. 여전히 참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은 예산이라도 쪼개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도 존재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경험이 더 쌓일수록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생긴다. 부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참여의 경험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난 5년여를 되돌아보면, 위원회·청년참여기구·청년단체 등 여러 위치에서 청년시민으로서 사회에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왔다. 그 외침이 어떤 때는 유의미하게 정책의 언어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허공에 머물기도 했다. 내었던 목소리만큼의 변화

가 늘 따라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와 내 주변이 시민으로서 사회를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의 경험’은 꽤 많이 만들어냈다. 대화하  
고, 모이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  
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불만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기대가 살아 있다는 증  
거라고도 생각한다. 불만이 있다는 건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어쩌면 불만이 큰 만큼 의지도 크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분노가 쉽게 쌓이는 시대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분노를  
방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다음 방향과 방법으로 바꾸어내는  
일이다.

청년의 참여가 단순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2025년 9월,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  
환과 혁신의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접했던 문장을 함께 공유한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두는 대신, 노동시  
장, 연금 정책, 주택 건설, 기후 보호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 부  
처 간 실무그룹을 구성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주  
요한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청년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  
여 연방정부 청년전략과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함(윤태영)”

“청년정책이 이행기 정책인 것은 청년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변화

하기 때문임. 어의 청년은 오늘 청년이 아닐 수 있고, 내년, 그 이후에 계속 새로운 청년세대가 탄생함. 청년기를 맞이하는 미래의 청년 누구나 참여하고, 청년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청년참여의 장을 만들고, 청년참여가 청년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해야함(변금선)”

“실제로 청년정책이 형성되어온 초기 2016년 서울시 청년의회 개최선언에서는 ‘청년의 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음. 이처럼 청년들이 원하는 참여란 청년 지원 정책에서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회 주요 아젠다에 대한 청년의 관점을 전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말함(권지웅)”

아무리 좋은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 마련된다 해도,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목적이 되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닿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무엇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청년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진 청년정책은 ‘도입’ 그 자체보다,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한 채로 현장에서 구현되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청년정책이 작동한다는 것은 사업 몇 가지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이 청년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실제 행정과 서비스의 언어로 실현된다는 뜻이다.

올해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년정책이 본격화되는 첫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문제에 대해 비슷한 현장 감각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런데 보궐 선거를 두 달여 앞둔 부산에서는 청년문제의 해법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업 유치 등 대규모 경제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청년문제가 심각하니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청년이 지역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선과 지역 유지·경제성장을 위한 ‘역군’으로 호명되는 방식이다.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부산 청년의 삶이 여전히 ‘버팀’의 연속일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지난 17년 동안 ‘청년문제=일자리문제’라는 도식 속에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청년의 고용 여건과 지표는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고,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는 주거, 부채, 마음건강 등 삶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먼저 반응한 주체는 지방정부였다.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청년문제는 ‘이행기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세대 내 불평등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재정의되었고, 주거·부채·마음건강까지 포괄하는 종합정책화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가 먼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청년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더 구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청년을 만나며 만들어낸 ‘서울시 청년수당’, ‘전주시 청년건강검진사업’, ‘제주도 청년갭이어’, ‘부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높은 체감도와 함께 일정한 효과를 인정받았다. 이 사업들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달라진 사회 환경 속에서 청년이 겪는 구체적인 현실을 사회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 청년정책은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와 청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며 발전해 왔다.

그렇기에 요즘 부산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더 답답하게 다가온다. 지역이 청년을 제대로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청년은 과연 어디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부산에 계속 머물러도 정말로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질문은 점점 개인의 불안으로 돌아오고, 그 불안은 다시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부산시는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을 본격 도입했다. 2020년 기준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국비·시비 포함)은 부산시 전체 예산 대비 0.7% 수준이며, 국비 의존도는 약 50%에 달한다. 대상 규모(시설·앱 사용 등 제외)는 부산 청년인구의 6.2%로, 타 시도에 비해 예산이 적고 국비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산은 관심의 크기를 반영한다. 사업과 예산을 함께 놓고 보면 부산시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이 더 커졌음에도 2021년 마음건강 신규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사례는, 청년문제 해결 예산이 주요 결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진짜 환대’다. 청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청년정책이 현재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버팀’은 종종 침묵을 동반한다. 그렇기에 2021년에는 더 많은 청년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곳곳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이야기로 남는다. 진정한 ‘다이나믹 부산’이 되기를 바란다.

## 원래

새해를 코앞에 둔 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다가 푸념처럼 내뱉었던 말이 마음 한켠에 걸려 계속 부딪혔다. “다 원래 그래.” “다 그렇잖아.” “거긴 원래 그래.”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

무력함에 기대어 웅졸해진 생각과, 틈 없이 팍 찬 확신을 나는 너무 쉽게, 거리낌 없이 말해버렸다. 그게 부끄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알고 경험한 건 늘었는데, 마음만큼 현실에서 해낼 수 있는 건 또렷이 보이지 않으니 “그렇기에, 그럴 수밖에”라는 핑계로 피해왔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내가 “원래”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체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체념은 늘 수동적인 수용과 반응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다.

“청년인구 유출이 문제인데,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개 이렇게 답했다. “부산에서 일자리와 성장할 기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산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언뜻 보면 무난한 답이다. 그런데 내게 문제였던 건, 그 답이 부산이라는 지역 안에만 갇혀 있고, 누구나 할 법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

일 수 있는 말로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적어도 바뀌나가고자 한다면 상상과 제안이 따라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데, 나는 매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반복하는 말과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는데 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런데 이후에도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더 받고, 언론에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소멸, 청년인구 유출이 문제다.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말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문득 이상해졌다.

‘지역은 원래 인구가 적었던 곳도 많았는데, 왜 이제서야?’

‘왜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

그때부터 앞서 받았던 질문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첫째, 각 지역만 놓고 보면 인구소멸=지역소멸은 분명 큰 문제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 제기와 대응책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결국 서로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한 지역이 ‘유출을 막는’ 방식이 다른 지역의 ‘유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건 과연 해법일까. 각 지역의 책임자들은 이런 구조를 인지하고 있을까. 지금 보이는 풍경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둘째, 지금의 청년세대는 ‘in 서울 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그렇다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가. 게다가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된 시대다. 지역을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고자 하는 시도는 오히려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하려는 이동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해지는가. 그게 이상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니 나 역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해 왔다. 하지만 관성대로 따라가기만 하다가는 문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멈춰 있지 않으려면 질문이 바뀌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지역소멸, 왜 시작되었나? 수도권 과밀화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왜 일어났나? 학력 차별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내재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다들 말하는 것처럼 원인이 청년에게 있는 게 맞는가?

짧게나마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파고들수록 선명해졌다. “원래 그런 건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근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원래”라는 말은 나를 책임의 주체에서 쉽게 빠져나오게 한다. 그래서 죄책감 없이 더 쉽게 비겁해질 수 있다. 익숙한 관념을 내세워 관성대로 따라가는 게 편하니까.

내가 빠르게 단정하고 회피했던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도 “원래 그랬어”라는 말로 뭉뚱그려 외면하는 지점이 늘어나는 듯하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외면하게 될까. 이럴수록 “원래 그런 건 없다”고 말하며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에 틈을 내고,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것들이 당연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그만큼의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쌓여 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것들이 ‘원래 그런 것’처럼 굳어지는 데에도 그만큼의 무지와 무관심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그것이 ‘원래’로 인식되게 만든 맥락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내고, 바꿔야 할 것은 더 뾰족하게 바라보며 바꿔낼 수 있을 테니까.

## 불만

하루 종일 불만으로 가득 찬 날이 있었다. “못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 건가.” “이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입을 여는 족족 문제를 짚는 말만 쏟아냈다.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면 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어렵게 앞으로 나아가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 성과를 뒤엎고 다시 개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장면들이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함이 쌓였고, 결국 터져 나온 말들이 그날의 불만이였다. 끝없이 불만을 말하고 나서야 문득,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내 시선이 비판으로만 굳어져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그건, ‘(청년)활동가’라는 정체성을 한켠에 두고 살아온 지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며 찾아온 슬럼프였던 것 같다. 청년정책은 제도화되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란이 수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그 무력감이 질게 밀려오던 시기였다.

청년 참여, 사회적 안정망, 불평등 해소 같은 큰 의제들이 내 개인의 화두로 자리 잡기 전, 20대 초반의 나는 활동가가 사회에서 해내는 역할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

게 숙의하고, 제도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를 만나 협력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지난하고 더딜 때도 많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즐겁고 소중했다. 낯설고 귀찮고 때로는 힘들어도, 바로 그 과정이 참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이라고 믿었다. 시민으로서의 감각은 “내가 시민인데!”라고 외친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참여라는 경험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2021년, 청년참여기구인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참여자가 남긴 말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청정넷은 말 그대로 풀뿌리 연결망이죠. 청년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지지받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을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곱씹을수록 ‘먹고 사는 일’만큼이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다. 서로 연결되어 사회를 함께 이해하고, 나와 우리를 둘러싼 구조를 함께 해석해보는 일이야말로 참여가 가진 힘이라는 감각이 커졌다.

현재 부산광역시와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는 청년참여기구가 운영되고 있고,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청년 관련 위원회에도 청년 위원 할당이 의무화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참여의 장이 넓어지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그와 함께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현상들은 또 다른 고민을 남긴다.

참여의 과정은 경험재다. 해가 거듭될수록 경험이 쌓이며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을 비롯해 청년들 또한 참여기구 운영

과 활동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그 결과 낮은 이해도와 부족한 예산 속에서 참여기구가 지향해야 할 운영 원리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목적이었던 가치-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시민성을 확장해가는 가치-는 열어지고, 형식과 절차만 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참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은 예산이라도 쪼개어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행정의 노력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고민의 경험이 더 축적될수록,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든다. 부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참여의 경험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난 5년여를 다시 돌아보면, 위원회와 청년참여기구, 청년단체 등 여러 위치에서 청년시민으로서 사회에 낼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외침이 어떤 때는 유의미하게 쓰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허공에 머물기도 했다. 내었던 목소리만큼의 변화가 늘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나와 내 주변이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를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의 경험은 분명히 많이 만들어냈다. 대화하고, 모이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불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본다. 불만이 있다는 건, 아직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대가 살아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불만이 가득한 만큼 의지도 가득하다는 말이,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분노가 곳곳에 쌓이는 시대다. 그렇기에 우리의 분노를 그저 소모하지 않고, 정확히 해석하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과 방법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불만을 끝으로 두지 않고, 다음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 공정

최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지자체가 소득별로 색상을 구분하거나 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시하면서, 지원이 곧 낙인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질책했고, 관련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비교적 빠른 시정이 뒤따랐다. 관련 보도에서 부산도 언급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몇 가지 사례만 떠올려도 그렇다.

첫 번째는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선착순 현장 접수’다. 지난해 여름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며 접수 방식이 ‘선착순’으로 결정됐다. 많은 시민이 마음을 졸이며 생계를 잠시 뒤로 미룬 채, 이른 새벽부터 부산도시공사를 찾았다. 그러나 현장은 기본적인 접수 시스템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폭염 속 안전 대비책도 미흡했다. 결국 약 1,000여 명의 시민은 뜨거운 날씨에 4~5시간을 기다리고도 ‘당일 접수 취소’라는 통보만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만을 고수한 안일함의 대가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에서조차 작은 안전을 기대했던 시민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두 번째는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선착순 접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다. 청년 연령에 해당하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인데, 지난해 5,000명 모집이 단 7분 만에 마감됐다. 부산시는 이를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지만, 실상 당시 수혜자 규모는 부산 청년인구 전체의 약 0.6% 수준이었다. 애초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사업이 말하는 대상이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이었다면, 실제로 그 청년들은 얼마나 진입할 수 있었을까.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통신비조차 부담되는 상황의 청년은 없었을까. 여러 측면에서 평가와 보완이 필요했지만, 올해 부산시는 ‘대상 규모를 8,500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하면서도, 오히려 선착순에 차등을 매겼다. “접수 순서에 따라 7,500명에게는 10만 원, 이후 1,000명에게는 5만 원 지급”이라는 방식이다. 예산이 부족하고 규모는 늘려야 했다는 고민의 결론이 ‘선착순 차등 지급’이었다면, 더 치열해진 경쟁의 부담은 결국 청년이 떠안게 된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끼리, 청년끼리 경쟁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된다.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행정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불합리함을 감당하는 몫은 개인에게 전가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부산청년센터 다문화가정 청년 대상 소셜다이닝 모집,

가족사진 증빙 요구'다. 7월 초 청년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셜다이닝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할 서류로 '가족사진'을 요구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서류가 있음에도 사진을 요청한 이유가 "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식으로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배려의 탈을 쓴 인권 침해에 가깝다.

외모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평가는 인권 침해의 요소를 내포한다. 상대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을 대상화하고,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칭찬이든 비하든, 평가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사진에 드러난 외모로 다문화가정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 공공이 공공연하게 차별을 실행한 것이며, 감수성의 결여가 초래한 피해는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

이 문제를 인지해서였는지,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7월 말 청년센터 SNS에 재업로드된 포스터에서는 취지는 유지한 채 대상이 '부산 거주 외국인 청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별다른 정정이나 사과 없이 수정 전 모집글이 남아 있다.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까지 포함해, 행정의 책임감과 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최종 수요자에게 온전히 닿지 못하고,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남긴다면 그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 행정 편의에 기대어 무더지는 감각, 그리고 그 무더짐이 시민의 존엄을 건드리는 순간들. 이제는 붙잡고 고쳐야 한다.

## 홍보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서는 “내가 놓친 지원금, 빠짐 없이 받는 법”,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원 받는 법 알려줄게”와 같은 제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정보를 나누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복잡한 정책을 짧은 카드뉴스나 릴스 영상으로 압축해 관심을 끈 뒤 정리된 자료를 배포한다며 팔로우와 댓글을 유도하는 방식은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어내는 흐름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에 즉각적인 관심이나 호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볼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방식에 사용되는 콘텐츠가 공공정책, 즉 공적자원이라는 점이다. 정책은 다수가 겪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수립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하지만 SNS 바이럴 콘텐츠는 이러한 맥락을 대부분 생략한 채 ‘청년’ 다수를 호명한 뒤 ‘놓치면 손해 보는 혜택’ 정도로 가볍게 정책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장된 정보는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상대적 박탈감 자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도외시킬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단지 SNS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 요즘 부산시의 정책 수립, 집행 방식도 비슷해 보인다. 전국 최초라며 발표한 ‘끼인세대 종합계획’이 그랬다. 부산시는 2023년 끼인세대 지원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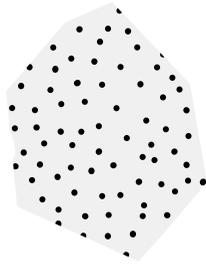
례를 제정했다.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끼인 세대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조례 제안 배경은 ‘청년은 청년이라서, 노년은 노년이라서 지원을 받는데, 끼인세대는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 사업은 121개에 예산 2000억 원대, 노년 사업은 53개에 예산 2조 원대인 반면 끼인세대와 관련된 사업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데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정책적 소외를 해소,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완성’을 수립배경으로 한 총 사업비 918억 원 규모 4개년의 끼인세대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35세 이상 55세 미만, 일과 가정, 부모 부양까지 책임지는 끼인 세대,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균형과 활력을 함께 챙깁니다’는 문구로 이 정책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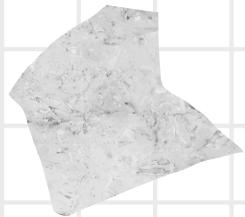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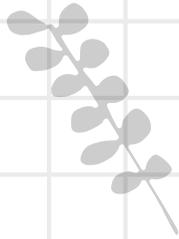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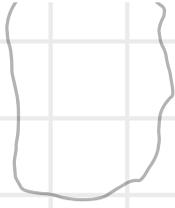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부터 출산양육, 노후준비’까지 6대 분야 32개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중장년일자리지원(경력단절여성 등), 소상공인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등의 기존 사업 대상을 끼인세대라 명명하거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그쳤다. 부산형 어린이 패스트트랙,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지원, 노후 놀이터 개·보수와 같이 끼인세대 대상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다수 존재했다. 전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2개에 불과했으며, 일자리 주거 문화 양육 노후준비 등 분야별 혜택이 나열되어 있을 뿐,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긴 생애구간을 관통하는 문제(▷부모 돌봄과 자녀 양육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 ▷주거비 부담과 대출 상환 압박이 집중되는 시기 ▷재취업 시장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커지는 미래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략은 사실상 부재했다.

끼인세대라는 영역의 신설만 다소 요란할 뿐, 정책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특히 ‘정책에서 소외됐던 세대를 위한 종합지원’이라는 말은 그럴 듯하다. 이런 공감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면 다음 단계는 대상 집단이 실제로 놓여 있는 사회구조적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답을 설계하는 것이다. 끼인세대가 겪는 문제는 단순한 ‘혜택의 결핍’이 아니라 생애 경로에서 여러 구조적 위험이 동시에 파도처럼 몰려오는 지점에서 비롯된다. 이를 외면한 채, ‘청년은 받으니 중장년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표면적 공감과 형평성 논리에 머무르면 결국 정책은 경쟁적 혜택 나열이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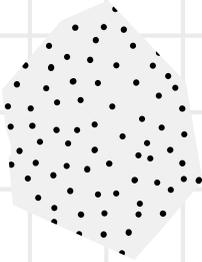
정책은 행정의 마케팅 도구가 아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단기적 호응’과 ‘혜택의 형평성’에 매달릴 때, 정책은 시민의 삶과 멀어지고 공허한 성과 목록으로 변질된다. 시민은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머무르게 되고, 행정은 단기적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 경쟁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다. SNS에서 주목 받을 ‘핫한 지원금’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절실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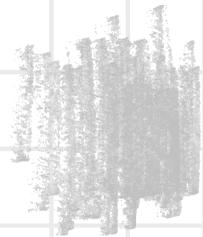
## 2부

### 도시의 빈틈을 메우는 약속



도시  
진심  
빈틈  
지역

약속  
미션  
증명  
다음



## 도시

부산시가 제작 지원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특집 강연 영상을 접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저명한 건축가는 부산을 ‘대한민국 최초의 메트로폴리스’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도시’로 규정했다. 그는 강연에서 조선시대 온돌 구조가 단층 건물만을 가능하게 하여 낮은 도시 밀도를 만들었고, 곧 농업 중심 사회와 부의 세습 구조 고착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콘크리트 아파트는 모두에게 지주가 될 수 있는 사회를 열었으며, 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하던 공간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분명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오늘날 목격하는 부산의 상황과는 사뭇 거리감이 느껴진다. 부산시는 매년 대규모 아파트의 신규 공급을 지원하지만,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밀도는 축소되고 있다. 밀도를 높인다며 아파트를 지어도 정작 그 공간은 부의 세습을 지향하는 소수에게만 열려 있다. 그는 아파트로 누구나 지주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 아파트에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힌 소작농에게 가까운 처지가 되었다.

신축 아파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물인가. 2023년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부산의 평균 급여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고 있다.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도 30만 원가량 낮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8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임금은 낮고 물가는 높은 ‘소비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래된 도시에서 사는 사람과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삶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글로벌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마치 싱가포르처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을 인하하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것이다. 그는 신축 아파트의 밀도를 소비력이 있는 해외 시민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말하는 ‘밀도의 힘’에 공감한다. 다만 도시의 높은 밀도는 높은 용적률의 신축 건물이라 아니라 지역의 시민이 공간을 점유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때 발휘된다. 핵심은 도시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간의 생산이 아니라 기존 공간의 세심한 관리다. 기존 주거지의 점진적 개선, 공공 인프라의 유지와 보강,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공간의 안전망 강화야말로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유명 건축가가 제시하는 부산의 미래는 결국 시민 없는 도시론이다. 화려한 인프라와 국제적 위상만을 추구하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뒷순위로 밀린다. 진정한 도시 경쟁력은 새로운 건물이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건축가가 제안하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나 북극항로, 지하 물류 시스템 같은 거대 개발 사업은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라는 현실 앞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오히려 공간을 소유한 자와 사용하는 자의 간극을 심화시켜 도시는 더욱 불평등해질 것이다. 이미 부산의 곳곳에서 투기적 도시개발의 정황이 쏟아진다. 부산의 청년들은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지역의 소상공인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준비한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땅한 공공 감시 체계는 부재하다. 지역 금융권은 공동담보 대출 등을 손쉽게 내주면서 부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18년째 전국 최하위 고용률을 보이는 부산시는 건설 경기마저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즉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투기적 도시 개발을 지속시키고, 불안정한 경제 순환을 만들어낸다. 오늘의 문제를 외면한 개발은 불평등과 종속을 더 강화할 뿐이다.

부산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려면 공간을 더 많이 생산하는 대신, 기보유한 공간을 시민의 삶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대한 비전보다는 매일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시민을 움직인다. 건설업 의존에서 벗어나 도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 더 많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해 관계의 밀도가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절실하다.

영국의 문화비평가 에밀리 부틀은 ‘우리는 왜 진정성에 집착하는가’라는 책에서 현대사회의 진정성이 하나의 도덕적 규범이자 마케팅 요소로 변질됐다는 통찰을 전한다. 그의 말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진정성이 넘쳐흐르고 있다. 감성적인 슬로건과 진심 어린 표정, 울먹이는 목소리. 모든 후보가 자신이 가장 진정성을 갖춘 후보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연출한 ‘진정성 있는 모습’은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를 극적으로 재현한 것일 뿐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기회는 많지 않다. 4년 혹은 5년. 여러 계절을 보내야만 겨우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가 생긴다. 이 소중한 한 표에 나의 지지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정치인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성을 말로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 정치적 수사는 화려한 만큼, 구체성과 현실감이 부족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한계에 부딪힌 실제 시민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정치가 모호하다면 정책은 분명하다. 정책은 숫자와 그래프로, 계획과 실행 여부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확신을 외칠 때, 정책은 가장 확실한 변화를 시작한다.

선명한 정책보다 진정성을 강조하는 정치의 풍토는 시민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시민 각자가 자기 진정성을 확신할수록 상대를 비판하고 배제하는 태도가 강해진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진정성은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상대 후보의 진정성에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결국,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간의 극단적 배제와 공격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치가 정책을 외면할 때 가려지는 이들이 있다. 진정성의 연출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는 이들, 사회구조의 피해자들이다. 5월 내내 다양한 시민을 만났다.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자신의 예술성을 뽐내는 장애 시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시민 연대 서명을 요청했던 부산의 피해자들이다. 한 청년 정치인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부조리라고 비평하며 진정성을 의심할 때, 이들은 고작 30분의 회의 참여를 위해 두리발(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 수단)을 예약하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저상 버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스템도, 배차 시간도 아닌 동료 시민의 시선이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이 권리임을 외쳤지만, 수많은 선거철의 약속은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욱 참담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같은 피해자끼리 법적 투쟁에 나서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많은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극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책은 더디게 나아가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 노동, 교육, 지역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정치 담론 뒤에 가려져 있다. 당장의 언어보다 강력한 것은 한 사람이 선택했던 지난 걸음이다.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란 좋은 말로 공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한 정책을 끝까지 이행하는 사람일 것이다.

정책의 구체성이야말로 정치인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다. 우리 사회의 진정성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성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시민적 성숙함이다. 당장의 언어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현실적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둔 시민의 민주주의, 민주시민의 제대로 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머지 않았다. 선거 기간 동안 외쳤던 변화의 의지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소외된 시민을 위한 공약이 예산과 인력을 동반한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을 감시하고, 공약 이행을 점검하며,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 결국 진정성 있는 정치는 진정성 있는 시민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작은 개울가에 아기 개구리가 있었다. 어느 날 아기 개구리는 물가를 지나가는 황소를 보았다. 아기 개구리에게 거대한 황소는 강하고 멋진 생명체였다. 집으로 돌아온 개구리는 아빠 개구리에게 커다란 황소를 보았다고 말했다. 아빠 개구리는 마음만 먹으면 나도 황소만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빠 개구리가 있는 힘껏 배를 부풀렸다. 하지만 아빠의 배는 여전히 황소보다 작았다. 아빠 개구리가 몸을 더 크게 부풀렸다. 부풀리고 부풀리고 또 부풀리던 아빠 개구리의 배는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다.

서두가 길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 ‘황소와 개구리’다. 언뜻 보면 이 우화는 개구리에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다소 냉혹한 운명론처럼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 짧은 우화가 언제나 깊은 통찰을 전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영역에 대한 이야기이며, 맹목적인 모방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에 대한 우화적 경고다. 이러한 맥락은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 도시에는 민간과 공공이라는 두 축이 존재한다. 서로를 보완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다수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부산의 지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활기찼던 민간 상권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도시의 경제를 이끌던 주체들도 하나둘 짐을 싸

서 떠난다. 마치 거대한 비행기의 한쪽 엔진이 부러지듯, 민간 영역이 무너지면서 도시의 균형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민간의 밀도가 감소하자 공공의 부피가 팽창한다. 공공이 모든 곳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들은 시민이 떠난 빈집을 매입하고, 공터를 관리하고, 도시의 다음 먹거리를 주도적으로 고민한다. 거대하게 팽창한 공공은 이제 민간의 역할을 자처하며 시장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시장의 시선은 수치화다. 수치화된 결과가 품질을 보증하고, 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의 합리성이 공공을 지배할 때 의미는 제거된다. 이용자가 부족하니 버스 노선을 없애자는 논리도, 이용자가 부족하니 청년 공간의 기능을 변경하자는 논리도 공공에서 먼저 나온다. 공공 서비스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에 부합한다면 때로 비합리적이라도 마땅히 운영해야 한다. 세출은 성장률을 담보하는 투자금이 아니다. 부풀어 오른 공공이 시장의 수치를 목표할수록 사회적 가치는 축소된다.

과거 민간과 공공의 균형이 유지될 때 부산 곳곳은 민간 주체의 무대였다. 부산대 온천천은 스트리트 공연의 중심이었고, 용두산 공원의 공터는 전국 춤꾼의 스테이지였다. 그때는 아무도 관람객 숫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청년은 공간에 자신의 창조성을 흩뿌렸고, 시민은 최선을 다한 예술가에게 박수를 보냈다. 평가가 없어도 예술은 도시를 채웠고, 거리의 무대는 매주 치열한 경쟁장으로서 진화했다.

공공이 장악한 지금은 어떨까. 시민이 도시를 쓰려면 기획서를 제

출해야 한다. 자신의 이력을 설명해야 하고, 몇 명의 관람객을 약속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서술해야 한다. 거리의 예술은 심사장으로 옮겨졌고, 전문위원에게 문화 상품으로 다듬어져 출시된다. 숫자는 의미를 거세한다.

숫자가 시도를 평가하지 않을 때, 공공의 기획이 공간이 장악하지 않을 때의 도시는 모두의 창의성을 담아내는 하얀 캔버스와 같았다. 지금 부산은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펼쳐낼 공간이 없다. 시장 논리와 합리성의 논리로 무장한 공공은 여전히 도시의 공간을 집어삼키고 있다. 도시 행정은 남천동에 99층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다. 공공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북항 내 오픈카지노 설치를 논의 중이다. 오픈카지노가 약속하는 압도적 수익이 어느새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로 제시된다. 황소처럼 더 크고, 더 거대한 도시가 되기 위해 있는 힘껏 배를 부풀리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황소를 닮으려 했던 개구리의 욕망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시선이다. 도시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무수한 이야기와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공공의 본질은 수치화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

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이 있다. 한 지역의 고령인구와 출산 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계산해 거주 인구의 재생산 가능성을 측정한 지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몇 년째 전 세계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수의 도시가 소멸위기지역, 빨간색으로 덧칠된다.

‘소멸위기’라는 진단은 우리가 곧 절멸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기에 충분했다. 두려움에 압도되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단기적 성과,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에만 매몰될 위험이 있다. 설익은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현상에만 대응하는 오류만을 반복한다.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아래에서부터 다져진 경제·문화가 튼튼하지 않아 도시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 도시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이 쌓아가는 목소리와 삶의 양식, 즉 문화가 아니라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문화를 구축한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였던가. 모두가 서울로 떠나며 지역은 무주공산이 됐지만, 사용 가능한 자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빈자리를 선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선발주자들이다.

전국에서 도시를 리브랜딩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속칭 브랜드 전문가가 지역의 개성을 발굴하고 로컬을 상품화한다. 특화 상품이 전국에서 나열되고, 지역은 특색 있는 관광단지로 변모한다. 콘텐츠화, 상품화되기 어려운 지역문화와 풍습은 탈락됐다. 몇 년 사이 내가 알고 있던 도시의 모습이 훨씬 단순해졌다. 분명 다양한 풍경이 있었는데 모든 노포가 베이커리가 됐고, 로스터리 카페가 됐으며, 게스트하우스가 됐다. 이렇게 소멸위기지역은 서로 닮아가고 있다.

차림표가 다른 식당은 저마다 원조이지만, 돼지국밥 거리의 식당은 저마다 자신이 원조임을 자처한다. 돼지국밥집은 살아남기 위해 투쟁을 겪고 있는데, 지역의 특색있는 거리를 기획한 전문가는 박수받으며 지역을 떠나간다. 한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시도 혹은 콘텐츠는 금세 번져 전국에서 재생산된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콘텐츠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고, 전문가는 유사 사례에 독특함 한 스펠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투자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 투자의 개념이 익숙지 않은 문화영역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지방 정부고, 벤처캐피탈이 중앙 정부다. 로컬 기획자의 목표는 자못 분명해 보인다. 몇 차례의 멋진 PT 끝에 장밋빛 지역을 셀링하며 투자금을 확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올린 다음 박수받으며 엑시트하는 것. 투자자인 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세금이라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 지역을 옮기는 것이 전문 투자자, 아니 로컬기획자의 오늘이다.

지역문화는 각자의 삶터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고 계승하며 만들어지는, 사람에 의해 구성되는 일상생활 양식이다. 지역에서 살아가지 않은 채 험거운 언어로 번역한 로컬은 쉬이 무너진다. 문화의 핵심은 혼종성이다. 상이한 시도가 서로 융합되고 발전하며 독특한 문화 양식을 형성한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추지 못한 도시 정책은 안전한 성과에만 집중했고, 지역의 특징과 고유성은 단순해진다.

고유성을 잃고 단순해지는 지역은 더 빠른 소멸로 나아가는 중이다. 고유성을 잃은 지역의 미래는 생태계에서 엿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수많은 동물이 터전을 잃었고, 살아남기 위해 서식지를 옮겨 다닌다. 이때 수많은 동물의 이종교배 사례가 발견됐다. 불곰과 북금곰의 이종교배, 일각고래와 벨루가의 이종교배 등 생존 위기를 마주했을 때 동물들은 이종교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종교배 생명체는 유전적인 이유로 종족을 유지할 수 없다. 소멸위기과정에서 시도했던 이종교배가 오히려 더 빠른 소멸을 촉진한다.

모든 도시에서 문화와 산업의 이종교배가 진행 중이다. 도시는 로컬로, 문화는 콘텐츠로, 성과는 창업이라는 단어로 번역돼 결합한다. 단일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 단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신의 고유한 서식지를 잃은 생명체처럼 소멸은 더 빠르게 이루어질 뿐이다.

## 약속

다시 약속이 펼쳐진다. 모든 교차로를 더 나은 부산, 더 나은 도시를 약속하는 이들의 얼굴이 장악했다. 벌써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이들은 특유의 미소와 함께 세련된 정책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모든 정책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부탁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변화를 약속한다.

하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교육은 정책성과를 당장 평가할 수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는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 그만큼 교육정책은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의 걸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들림 없이 걸어온 발자국만이 앞으로 걸어갈 방향과 의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부산시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정책이 있다. 먼저 대학 교육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존폐 문제가 떠올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글로벌 대학을 선정했고,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최종 선정되었다. 두 대학은 2004년과 2021년에도 통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학생과 교총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산대-부산교대의 통합 움직임이 가장 반대한 곳은 한국교총이었다. 2021년 당시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대 존폐는 어용주의적인 발상이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초등교사를 증원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교육대학의 전문성과 독립성만큼은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던 조직은 한국교총이었고, 가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회장은 현재 부산시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하윤수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이다.

3년 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산교대의 통폐합에 반대하며 교육 공공성의 강화를 말했지만, 이제 부산 글로벌 대학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를 제안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여전한데 3년 사이 무엇이 변한 것일까. 부산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산·학의 종합적인 연계를 계획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산에서 기르는 것을 모토로 가장 먼저 특성화고의 전환을 예고했다.

특성화고를 K-팝고등학교, 고리 원전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지역 정착과 함께 취업을 지원하는 부산형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산에는 이미 우수한 교육 역량을 갖춘 네 곳의 마이스터고가 있다. 부산자동차고, 부산기계공고, 부산해사고,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다.

이렇게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졸업생은 부산을 떠나 경기도로 향한다. 교육 정책은 마이스터고에 진학한다면 현장 전문가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역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 정책은 분명하다. 탈산업도시를 지향하며 국제적인 금융허브도시를 향해 걸어간다. 제조업의 거친 색채를 지워내고, 금융과 마이스 산업 중심의 세련된 자본 경제를 덧칠한다. 지역의 청소년이 교육 정책의 로드맵에 따라 한 분야의 마이스터(장인)가 되어 안정적인 숙련 노동자로 되기에는 기반 산업의 전환이 너무나도 빠르다.

부산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은 59%다. 지역에 정착한 졸업생 가운데 자신의 전공을 살린 이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청년 유출을 걱정하는 도시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꿈과 안부는 묻지 않는다. 마이스터고의 첫 약속처럼 핑크빛 미래를 약속하는 지금의 교육 정책 역시 깊이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지키다라는 말은 곧을 직(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곧게, 바르게, 옳게 만드는 것이 지키다(직히다)의 본뜻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처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옳은 가치를 향해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교육의 시작이다. 아이들에게 마이스터의 꿈을 심었다면, 응당 그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자리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교육 정책의 의무일 것이다.

우리가 일반 영리 기업이 아닌 비영리 공익 조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성과와 효율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할 만큼 조직의 미션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직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큰 동력이 된다. 비영리 공익 조직에서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는 순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조직의 미션과 실제 조직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질 때, 그 괴리가 회의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많이 목격했던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는 비영리 조직에서 첫 직장 경험을 한 신입직원이 회사를 떠나며 비영리 조직 자체에 학을 떼는 경우다.

‘저는 비영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다. 그것은 비영리라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이 미션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직의 미션은 비영리 조직에서 중심이 되는 축이다. 그렇다면 조직에서는 미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미 사업정관에 적혀 있는데 말이다.

미션을 문서를 넘어 조직 자체의 DNA로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과정을 요구한다. 구성원들이 미션을 체감할 수 있어야 외부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단계도 가능해진다. 명확한 언어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사업들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스며들도록 설계해야 한다.

보통 미션은 추상적 가치로 존재하지만, 조직이 하는 일은 그 가치를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회의에서 어떤 우선순위와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는지,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쓰는지, 구성원의 성장 방향을 어떻게 상정하고 지원하는지 같은 일상적인 장면들이 모두 미션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든 비영리 조직에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고민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활동의 지속을 위해서는 조직의 미션과 나의 욕망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직의 방향과 어떤 지점에서 닿아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직의 미션과 나 사이에 연결감이 생긴다. 반대로 이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앞서 말한 ‘현타’처럼 일이 돌아오는 형태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다. 미션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동시켜야 하는 영역이다.

비영리는 영리 조직과 달리 ‘수익’과 같은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

문에,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와 방향성이 흐려지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군가가 정답을 내려주는 일도 드물다. 결국 어떤 일을 선택해 집중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스스로 주도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으면, 일은 쉽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조직의 미션을 향하던 개인의 일이 경로 이탈을 하기도 쉽다.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역할과 권한의 경계가 분명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리더십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결국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나의 일과 어떻게 연결할지 끝까지 고민하고 책임지는 태도다.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 내 업무의 성장과 따로 논다면 조직도 나도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조직일수록 구성원은 성장하고, 조직은 스스로 설정한 미션에 더 가까이 도달한다.

## 증명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았다. 이제 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자,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다.

하지만 복지의 이면에 종종 간과되는 그림자가 있다. ‘약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설이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다. 하지만 그 복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오히려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나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공적인 서류로 규정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 나는 부산, 그리고 원도심 시민을 만나며 이 역설적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한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명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복잡하고 세분화된 기준이 설정된다. 언뜻 합리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가

족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적게는 수 종에서 많게는 수십 종에 이르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 혹은 당장의 생계로 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시간조차 없는 이들에게 이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

내가 사는 부산 영도구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이 그렇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의 근로 내역을 모아야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고용이 불규칙한 경우 이를 서류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개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생활의 노출을 강요한다. 복잡한 행정 절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복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더 큰 고통은 심리적인 부분이다. 결국 많은 이들이 복지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 당장의 굶주림보다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멸감이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청년정책에서도 유사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

청년정책은 대개 ‘취업’, ‘주거’, ‘창업’, ‘심리상담’ 등의 영역에서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건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청년들은 자신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청년’임을 증명해야 한다. 2014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증명’ 기반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질병과 실직으로 생활 고에 시달렸지만, 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고 자신의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정작 정보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복지의 어원은 ‘잘 지내는 상태’다. 진정한 복지는 단지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청년정책의 목표도 다르지 않다. 청년이 ‘지원 받을 자격’을 증명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하는 것. 이는 이웃의 필요를 보편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거대한 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상자임을 증명하라’는 차가운 요구 대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연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청년정책의 그림자를 걸어내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국 대상자 혹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일 것이다.

부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2017년 출범 이후 약 8년간 운영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청년 참여 기구가 설치되었다. 양적으로는 상당한 확대를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더 정확한 상황이 드러난다. 기초 단위의 경우 해운대구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고, 기타 자치구들도 대부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수준의 예산 규모에 머무른다. 광역 청정넷 역시 2020년과 2021년 9,500만 원까지 확대되었지만, 현재는 약 6,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참여 구조 역시 현저한 변화를 겪었다. 초창기에는 해당 연령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 희망자 중 ‘발대식 필수 참석 가능’이 유일한 조건이었다. 초기에는 참여 분야도 10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설정되거나, 참여 후 논의를 통해 분과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정책네트워크 참여 인원이 200명을 상회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평균 인원이 75명으로 축소되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류 심사를 통한 선발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진입에 문턱이 생겼고, 활동 가능한 분야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의 대표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초기에는 청년정책이라는 개념이 선언적으로 꺼내졌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자연스럽게 학습 욕구를 가진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누가 청년이며, 사회 공동체가 함께 토론해야 할 공동의 과제는 무엇인지 폭넓게 대화했다. 하지만 현재는 정책 제안을 통해 자신의 활동이나 사업, 진로에 실질적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기 영역을 모색하는 청년의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는 자기 주제와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참여자가 많아졌다. 그 결과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민원 해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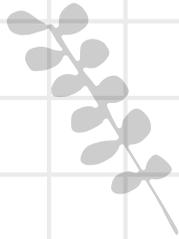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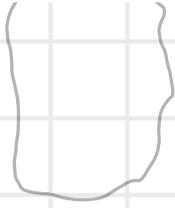
이러한 질적 변화에는 행정의 대응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한다. 긴 호흡으로 참여 경험이 없는 청년을 초대하기보다는, 관성적인 사업 일정을 맞춰줄 수 있는 기참여자를 우대한다. 결과에만 집중해 2시간 내외의 행사 형태로 토론이 축소되고, 해당 시간 내에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정책 제안이 마무리된다. 청정넷의 표면적 기능은 정책 제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정책 설계가 아니라 참여자 간의 대화와 숙의 과정이다.

참여 기구의 목적 변화는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전담 운영 지원 조직의 부재이다. 전담 조직이 존재한다면 1년 주기로 반복되는 활동의 맥락을 파악해 참여자 논의를 관련 이슈와 연결하고,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적절한 분과와 매칭하는 조정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부재하거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조정이

필요 없는, 누가 보아도 어렵지 않은 사안만 정책화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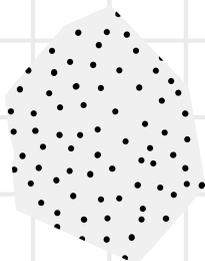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관료적 행사가 청년들이 처음 경험하는 정책 참여의 장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단위 참여 기구를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보다 광역 단위 참여를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광역 청정넷이 제대로 작동해야 기초에서도 체계적 교육과 정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청년정책도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양적인 실험과 확장보다는 의미에 집중하고, 질적인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참여 계층의 편중, 유사하게 양산되는 정책 제안, 속의 과정의 형해화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가 아닐까. 이제 우리는 형식을 넘어 실질적 의미를 도모해야 하는 다음 과제 앞에 서 있다.



### 3부

## InterView 청년활동가를 만나다



치치

구름

황성재

빛을 이루다

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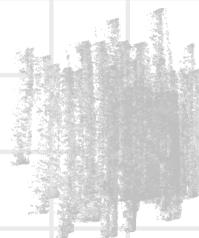
창웅

야르

조아

우왕

서원





치치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분들,  
‘일’이라는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풀어보려는  
청년들을 응원해요.”

-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이사

- 피치마켓 교육 기획 매니저 / 511프로젝트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치라고 해요. 부산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매니저로 일했고, 지금은 부산을 떠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 Q2. 청년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엉뚱한 경로였어요. 2018년에 부산시 청년위원회 1기 위원으로 들어간 게 시작이었는데, 당시 위원회가 여성과 청년 비율을 맞추려고 일부를 공개 모집했거든요. 거기 지원해서 덜컥 들어갔어요. 대학생이었고, 가장 어린 위원이었죠. 근데 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청년이 뭐고, 청년정책이 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위원 명단에서 소속에 '청년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사람(오동)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한테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긴 질문 목록을 들고 가서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게 이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로 이어졌고, 청년센터에서 실무 경험도 하게 된 거예요.

### Q3. 청년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나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2021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포스터에 썼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요즘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학교 누구', '어느 회사 누구'가 아닌 개인으로 흩어지잖아요. 조직되어 있지 않은 각



자인 거죠. 청년활동은 그렇게 흩어진 목소리들을 모아서,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 구조나 제도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함께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Q4. 부산청년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가요?**

센터에 매일 찾아오던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엔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행사 후기 남기고 그랬는데, 하반기쯤 되니까 부산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자기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센터가 조성한 환경을 딛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센터의 역할을 실감했어요. 또 하나는 동료 은진이 했던 말이에요. '청년들이 기댈 데가 없어 보여.' 스무 살 갓 넘긴 대학생을 인터뷰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말이었는데,



그 청년이 '처음으로 어른과 대화한다고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했대요. 당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대화가 처음이라고. 그 말이 속상하면서도 센터가 왜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 Q5. 청년공간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환대받는 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나 '내가 갈 수 있는 곳인가', '내가 포함되는 영역인가' 가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제되고 규정이 많은 공간은 쾌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정지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산청년센터는 리셉션을 두지 않았어요. 리셉션이 있으면 운영자와 이용자가 나뉘고, 이용자가 '나의 공간'이라고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의자와 책상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했고, 누구나 자기 활동 포스터를 붙일 수 있게 했고, 평일 저녁과 일요일까지 열어뒀어요. 언제나 갈 수 있는 곳,

그게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청년공간이에요.

**Q6. 센터를 떠난 후 여러 조직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뭘 찾고 계셨어요?**

처음엔 기준이 하나였어요. '멀리 보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조직.' 청년정책을 만나면서 갖게 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조직을 거치면서 그 기준이 점점 구체화됐어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동료들과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조직이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기준으로 쌓여갔어요.

**Q7.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한 조직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대표단한테 '지금 제가 맡은 일을 하려면 조직 전체 사업 전략이 먼저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매일 조직 구조를 시각화해서 대표단과 나눴고, 제가 들여다보는 영역이 점점 넓어졌어요. 정말 지난하고 힘들었어요. 경력 수십 년인 분들이 이미 굳힌 방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열심히 일할 맛'이 나기도 했어요. 결국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건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내 일과 어떻게 연결할지 끝까지 고민하고 책임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Q8. 비영리 조직에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성원의 역량과 잠재력을 파악해서 서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중간관리자들과 의사소통이 명확한 사람.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뢰를 주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완벽한 리더는 없지만, 리더의 강점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조직을 좀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Q9. 청년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자신은 어땠어요?**

.....  
 고등학교 때 학벌주의가 정말 강했어요. 서울 일부 대학 말고는 지역 대학 이름도 몰랐어요. 성적순으로 배정되는 정독실, 성적순으로 나뉘는 반들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내재화했죠. 수능 성적표 받고 즐



업할 때는 어리석지만 더 이상 행복한 삶은 글렀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삶이 뿌영게 보였어요. 그러다 청년정책과 청년활동가들을 만났는데,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제각기의 모양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보여준 선배들 같았어요. 그때 '내가 살고 싶은 사회로 가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마음이 처음 생겼어요.

#### Q10.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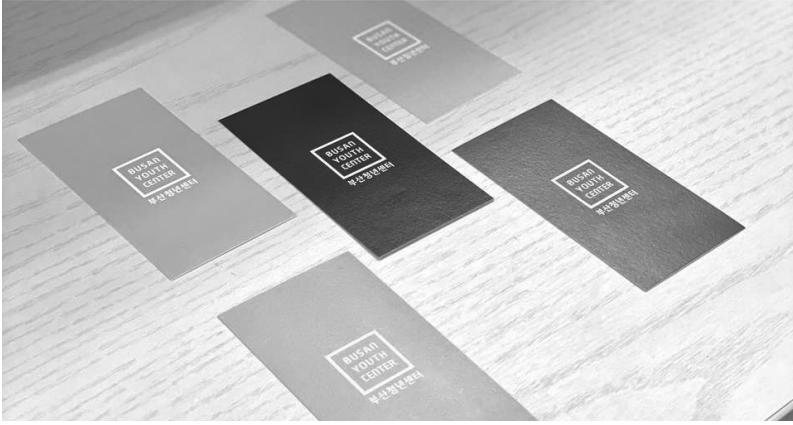
세상이 책과 매체로 배운 것보다 훨씬 다양한 모양이라는 거요.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저 착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한동안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에요.

**Q11. 앞으로의 삶의 경로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일이 반드시 조직 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어요. 1인 활동가로 일하는 것,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 하고 싶은 게 선명하다면 일의 형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압박은 있지만, 제가 공감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곳에서 그 조직을 사랑하는 경험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Q12. 지금 청년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경험과 경력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 이 생태계에서 좋은 일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저도 좋은 경험만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자기가 공감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사랑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성원이 자기 일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몰입도도, 효능감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거든요. 그게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분들, 특히 '일'이라는 영역에서 풀어보려는 청년들에게 응원 보내요.







구름

“심을 찾아 떠난 길에서  
가장 무거운 앓을 얻어 돌아왔고,  
아마 그게 제가 원했던  
깊이의 시작일 거예요.”

-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사무국장

- 부민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이라고 해요. 12년 차 사회복지사이고, 부산 원도심에서 오래 일했어요. 서구, 중구, 영도구, 동구. 산복도로라는 네 글자가 제 경력의 절반 이상을 요약해요. 청년센터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다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 Q2. 청년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청년활동가라기보다 사회복지사예요. 8년 넘게 영도 동삼동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진 해였는데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받으면서 ‘저희도 마스크 없어요’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처음으로 결재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웠어요. 도망치듯 대학원 원서를 썼죠. 쉬려고 간 건데, 2021년 4월에 부산청년센터 팀장 채용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청년’이라는 분야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8년 차 일개미의 본능이 이겼어요. 까짓거 새로운 분야 배워보자 하고요.

### Q3. 청년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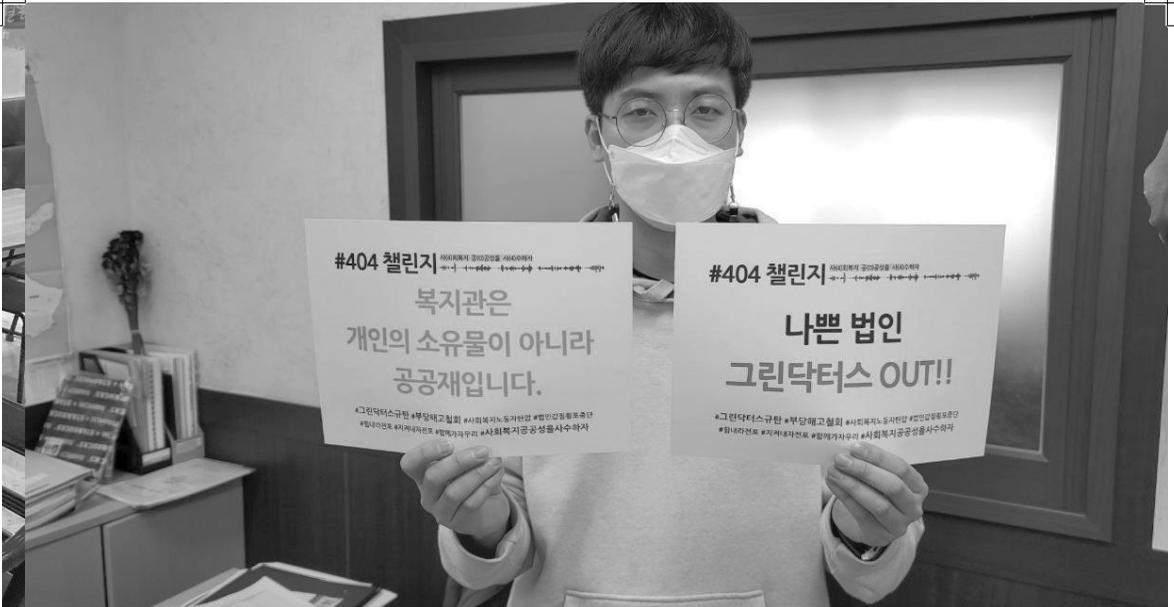
저는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청년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청년이 ‘지원 대상자’로 잘 안 보여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은 있는데 청년은 없어요. 그런데 청년센터에서 직접 만나보니까, 청년은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참여’와 ‘시도’, ‘권리’라는 언어로 접근해야 할 주체적 시민이었어요. 저는



청년활동을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삶을 기획해 나가는 일이라고 정의해요. 대상자이면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큰 전환점이었어요.

**Q4. 부산청년센터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청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담당했어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지지하는 사업이었는데, 5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활동에 대한 청년들의 개념이 이렇게 넓을 수 있구나, 놀랐죠. 심사 과정도 인상 깊었어요. 센터장님이 2차 심사를 공모팀들 간의 상호 투표제로 진행했거든요. 딱딱한 방식만 알던 저한테는 신선했고, 사업 목적에 완벽하게 맞는 방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Q5. 그 사업에서 기억에 남는 팀이 있어요?**

다 기억에 남지만, 나비학당팀이 특해요. 니트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 하고 소식지를 발행했는데, 쌍방향 소통을 시도하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어요. 그리닝팀은 수영 팔도시장에서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했어요. 청년들이 연대했을 때 발휘되는 힘을 느꼈어요. 9팀 모두가 평소 생각만 하고 실험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가까이서 지지하고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Q6. 복지관과 청년센터,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어요. 복지관은 안정된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데, 청년센터는 유연하고 빨라요. 사용하는 언어도, 일의 추진 속도도, 만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르고요. 저한테 유연함과 탄력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동시에 그 시간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



는 제 시선과 태도, 실천의 윤리를 다시 돌아보게 해줬어요.

**Q7. 원도심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 동네에서 ‘청년’은 어떻게 보이나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제 복지 대상자 리스트는 ‘노인’ 아니면 ‘장애인’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제가 원도심에서 만나는 청년은 몇 가지예요. 감성 카페에서 라테 내리는 알바생 청년은 여기 살지 않아요, 통근할 뿐이죠.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여기 살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 전 기초수급자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굳게 닫힌 작은방이 있었어요. 손자가 몇 년째 저 방에서 안 나온다고 하셨고, 틈으로 새어 나오는 음식물 냄새. 어쩌면 그게 제가 원도심에서 만난 ‘청년의 냄새’가 아니었나 해요.



#### Q8. 그 청년의 방문을 열 수 있었나요?

못 열었어요. 그를 상담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도, 청년수당 외에 뭘 제안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우리 복지 시스템은 '청년'을 호명하는 데 서툴러요. 소득과 재산으로 빈곤을 측정하는데, 학자금 빚에 쪼들리고 월세에 허덕이며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의 빈곤은 그 낡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거든요.

#### Q9. 대학원에서 얻은 게 있다면요?

논문은 못 썼어요. 낮에는 부산에서 청년센터 팀장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진주로 차 몰고 가서 수업 듣고. 쉬려고 간 대학원에서 극기훈련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의미 없진 않았어요. 8년 차 실무자 신분으로 듣는 수업은 달랐거든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왜 이럴까?' 하는 물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다 '행정유보'라는 단어를 만났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 Q10. 행정유보가 뭔가요?

우리나라 복지, 사회권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에요. 8년간 현장에서 그 '숫자'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울고 웃었는데, 그 무력감이 어디서 오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사회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이전에 행정의 베푸는 시혜의 영역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 Q11. 앞으로의 삶의 경로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여전히 현장에 있어요. 여전히 행정의 정해준 그 숫자 안에서 클라이언트와 씨름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 알아요. 산 위로 올라가서 중구, 서구, 영도구, 동구 경치



를 보면서 어르신 돌봄과 고독사를 걱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원 다시 가야죠. 마무리 못한 공부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Q12.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뭐예요?**

‘사회복지사는 어디에서든 사회복지사다.’ 청년센터에서 7개월 일하  
면서 확인한 거예요. 익숙한 현장을 벗어났을 뿐, 저는 여전히 사람  
과 구조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쌓은 경  
험 위에 청년센터에서의 시간은 ‘청년과 정책’이라는 질문을 엮어줬  
고, 제 생각의 폭에 여백을 만들어줬어요. 심을 찾아 떠난 길에서 가  
장 무거운 앓을 얻어 돌아왔고, 아마 그게 제가 원했던 깊이의 시작  
일 거예요.

황성재



“다만 환대하는 역할,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일이  
저한테 맞는다는 건 알게 됐죠.”

- 부산청년센터 실무자
- 청년 커뮤니티 사업 담당자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재예요. 94년생이고요. 동네청년공간 니트플레이스에서 매니저로 일했고, 이후에 부산청년센터에서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담당했어요.

### Q2. 청년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서였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청년정책의 수혜자 입장이 된 거였는데, 서원이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정책 위에서 내가 수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저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겁이 많은 상태였는데요. 서원이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정해진 경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칭해줬어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죠. 이후에 동네청년공간 니트플레이스가 열렸을 때 매니저로 들어갔고, 거기서 12월에 끝나고 다음 해 3월에 청년센터로 갔어요.

### Q3. 청년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청년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조직은 뭘 위해서 하고 있고, 목표나 비전이 뭔지' 공유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사업이라면 일을 하기 위한 감각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태랄까요. 다만 동네청년공간에서 일할 때는 조금 달랐어요. 찾아오는 분들을 환대하고, 흩어지지 않게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고, 관계를 만드는 게 있었으니까요.



#### Q4. 동네청년공간과 청년센터, 두 공간이 어떻게 달랐어요?

동네청년공간은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환대하고, 소통하고,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기획해서 운영하고.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것도 다 했죠. 청년센터는 달랐어요. 사무실과 청년이 만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애당초 섞일 일이 없었어요. 저는 커뮤니티 사업 담당이라 연결된 사람들만 만났고, 대관 업무도 승인이나 반려 처리하고 장비만 봐주는 식이었죠.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환대하는 일은 없었어요.

#### Q5. 각각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니트플레이스에서는 급여가 아쉬웠어요. 시간 투여 대비. 환대하는 역할이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컸는데. 그래도 훨씬 자유롭게 기획하고 진행해볼 수 있었고, 서원이나 야르처럼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

#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킹 데이' 오리엔테이션

부산청년센터 3층 (13:00~17:00)



민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 공간의 개념 자체가 좋았어요. 센터는요, 솔직히 말하면 상사가 아쉬웠어요. 일을 배운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해, 작년 자료 그대로 해'라는 식이었거든요. 융통성이나 효율적인 경로를 고민하지 않고. 작은 제안들을 하고 싶었는데 현장의 제안을 위계로 누르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계속 부딪혔죠.

## Q6. 청년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매니저 2급 교육 다녀오고 자료도 받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원래 광역센터는 기초 청년공간을 조율하고 위로는 청년재단과 소통하면서 중간지원을 하는 조직이더라고요. 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지금은 그냥 수탁기관이에요. 시에서 요구하는 걸 해서 주는 곳. 청년들이 오고 싶게끔 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관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누가 오든 신경 안 쓰고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



고, 인원수만 챙겨지면 되는 거예요. 사진 찍었고, 증빙서류 문제없고, 이것만 챙겨지면 뭐가 문제야, 라는 분위기죠.

### Q7. 현장에서 청년들한테 듣는 요구가 있어요?

대관해서 쓰시는 분들 요구는 단순한 거예요. 건전지가 다 됐다,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 건 매번 들어오는데 시설 반영은 어렵죠. 소셜다이닝 공간인데 냉장고랑 전기렌지를 동시에 못 써서 하나만 쓰라고 안내해야 해요. 이게 소셜다이닝 공간인가 싶죠. 커뮤니티 분들은 증빙 자료가 너무 과도하다, 모든 행사를 다 가야 하느냐, 이런 문의가 많아요. 역량 강화 행사라고 청년 전문가 분들 강의를 듣게 하는데, 자기 커뮤니티랑 안 맞아도 와야 한다고 하니까. 저도 현타가 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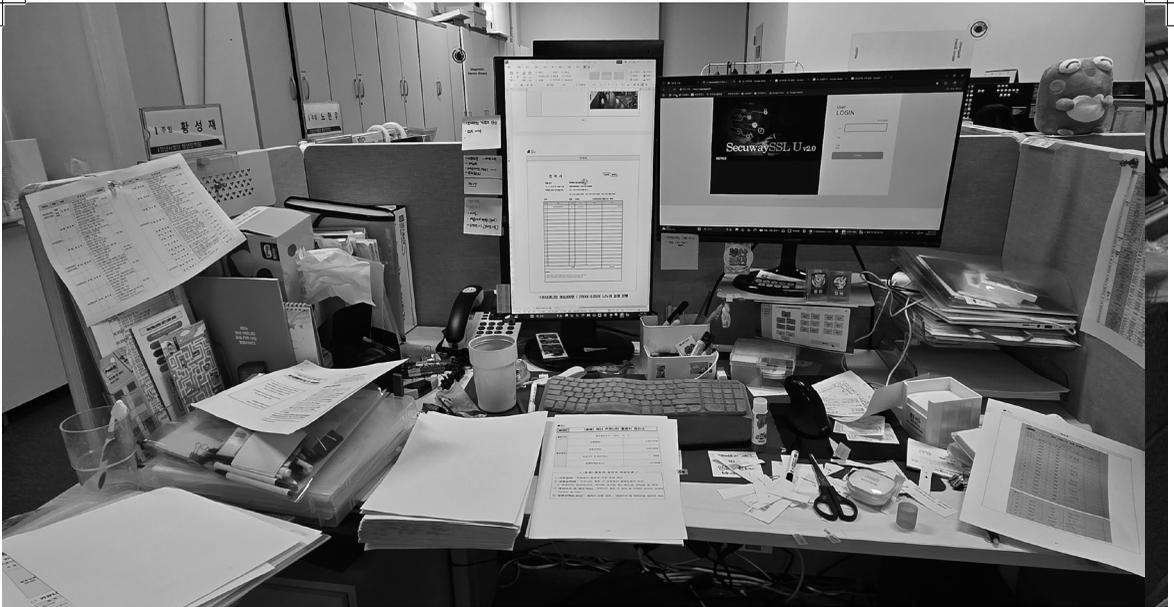


### Q8. 청년정책의 효능감을 느끼세요?

잘 모르겠어요. 청년커뮤니티 사업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행사 참여나 보고서 같은 부가적인 노동시간을 다 계산하면 그냥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청년 입장에서요. 문화패스도 10만 원 지원받으니까 문화생활 할 수 있다, 근데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문화를 누리지 못해서 결핍이 있는 취약한 대상을 위해 쓰겠다는 전망도 없고. 모두가 사업 추진하는 것에 급급해서, 이걸 성취하자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 Q9. 이용하고 싶은 청년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제 삶에서 진짜 문제는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인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든, 비단 취업이 아니어도, 그 불안감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나 자신감, 해결책 비슷한 거라도 창구가 있다



는 걸 느끼고 싶거든요. 근데 청년센터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게 있나,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게 있나.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저는 도움이 됐지만, 6개월 거치고 나서 다시 지원받는 청년이 많아요. 상담해주고 매개해주는 사업은 올해 시작했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전세 지원이나 자금 형성 지원은 관심 있고요.

#### Q10. 일 경험 차원에서 동료들은 어땠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올해, 작년부터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 자체가 따뜻하고 또래들끼리 모여 있는 활발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센터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분위기가 자유로운 것도 있고요. 그게 좋았는데, 일을 어떻게 쳐나가는지는 배운 게 없었어요. 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우리가 어디로 목적을 두고 가는지,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Q11. 앞으로의 삶의 경로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경력이 인정된다는 게 있어서 센터에 있는 게 좋긴 한데요. 내용으로 보면 동네청년공간이 저랑 훨씬 잘 맞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환대하는 역할,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일이 저한테 맞는다는 건 알게 됐죠.

**Q12. 청년정책이나 청년센터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을 너무 많이 따지는 게 아쉬워요. 정량적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목표치 만들고 양만 많이 치고, 품질은 희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여하는 분들한테 항상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필요한 사람이 오게끔 열려 있고, 우리도 필요한 걸 제공해서 맞아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을 이루다



“결국 최초의 경험이 없으면  
선택하기 어려우니까요.”

- 부산청년센터 실무자

- 부산 청년문화패스 사업 담당자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빛을 이루다라고 합니다. 부산청년센터에서 문화패스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이 부산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지원했습니다.

### Q2. 청년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센터에서 문화패스 담당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저는 공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닉네임인 '빛을 이루다'도 제가 공연할 때 만났던 배우 대역 이름입니다. 부산이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 Q3. 청년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문화 쪽에서 일했으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기회를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뮤지컬이나 연극, 클래식 공연이 한정적이잖아요. 서울은 많은데요. 문화패스 같은 사업을 통해서 평소 문화에 별로 관심 없던 청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Q4.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 어떠셨어요?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본질이 문화



생활 향유의 향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청년들은 혜택에 더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내가 돈을 받고 지원을 받는구나'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문화패스가 그냥 혜택 받는 차원의 일환 중 하나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 Q5.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작년에 5천 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관람한 분들은 3천 명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람하는 인원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 Q6. 내부적으로 원인 분석도 진행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이 있고 하니까요. 그게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선시켜서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 그건 뒷전이고 성과에 목표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 **Q7. 사업 구조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저는 사업이 이미 계획된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는데요. 아쉬웠던 건 참여 기회가 한 사람당 1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 문화패스는 일정한 금액을 주고 여러 번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부산은 1회에 모든 지원을 다 해버려서 그 1회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남든 모자라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미루다가 못 하게 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같이 보고 싶은데 같이 볼 수 없는 것도 문제였고요.

**뮤지컬**

원작: 로베르토 베니니    각색/극본: 장우성    작곡/음악: 정상일

# 그라찌에 바바

## Q8.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던가요?

확실히 뮤지컬 인기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클래식 공연이었습니다. 애초에 비용이 비싼 것들이요. 지역 연극이나 다른 장르는 선택이 적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냥 비싸고 인기 많고 많이 들어본 것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공연은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면 청년들이 알고 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Q9. 다음 회차에 개선된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인기 장르 같은 경우에 연극 3개를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 상품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를 신청하면 3개를 볼 수 있게요. 비인기 장르들을 조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넓히려고 했는데, 반응을 다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Q10. 센터에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청년인데, 이 청년들이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청년센터에서 일하면서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제약되는 게 많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 아예 없었습니다. 행사할 때 스텝으로 도와주러 가는 경우 말고는요. 문화패스 담당자였으니까 문화패스만 참여할 수 있었고, 옆에 커뮤니티 사업이나 다른 담당자가 하는 사업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 Q11. 앞으로의 삶의 경로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쉬움이 커서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사업만 담당하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해볼 수 없었던 게 아쉬웠고요. 담당 업무를 제외하고는 같이 고민하거나 경험할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Q12. 청년정책이나 청년센터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사업을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새로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갖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청년이 여러 개의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여러 개 가져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문화패스로 말하면, 1회성 혜택보다는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인기 장르나 지역 예술에 대한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최초의 경험이 없으면 선택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연

“저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체성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 하이 앤드 하우스 대표  
- 청년활동가, 마을활동가

**Q.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청년들 회원이자, 잠시 쉬고 있는 청년활동가 정하연입니다. 지금은 '하이 앤드 하우스'라는 로컬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청년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2018년쯤, 부산시장 선거가 있을 때였어요. 청년 정책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청년 유권자 행동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해우소'라는 청년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유권자행동에 청년 단체로 결합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도 호기심이 생겨 참여하게 됐죠. 처음으로 부산시청에 가서 피켓도 들고, 기자회견도 해봤어요.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고민하다가 내용을 디자인해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Q.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외로움보다는 궁금함이 컸어요. 해우소 말고는 청년 활동을 하는 분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거든요. '문화기획'이라는 명칭 자체도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았고, '청년 활동'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불안했고, 하고 싶은 걸 찾고 싶어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자기 탐색의 과정이었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Q. 하연이 정의하는 ‘청년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 활동은 생애 주기에서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 필요를 메시지로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꼭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청년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를 청년 활동이라고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부산청년들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요?**

제 기억에는 유권자 행동 이후 이 움직임을 살려서 법인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부산청년들이 그렇게 사단법인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때 더 크게 와닿았던 건, 내가 아는 동료가 부산청년들에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또래 집단으로 만났던 활동가 동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뭔가 잘해보고 싶던 시기였고. 그래서 부산청년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Q. 활동에 대한 애정이나 목표를 갖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가요?**

2020년 청년주간이요. 그때 ‘청년문화로 협동조합’ 사무국장이었는데, 단체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 단체를 잘 이끌고 싶었고, 부산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함께 역여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했죠. 청년주간 때 만났던 멤버들 덕분에 본격적으로 ‘동료’라는 감각을 갖게 됐어요. 일하는 방식이나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저한테





도 엄청난 공부이자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동했고, 같이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 ‘청년문화로 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였나요?**

해우소가 제가 받을 담근 첫 조직이었다면, 청년문화로 협동조합은 본격적으로 제 일, 제 업을 만들고 싶던 시기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료가 있는 집단이었어요. 지역 안에서, 특히 동네 단위에서 기획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확립하던 때였죠. 같은 주제에 공감하는 동료들이 있는 집단, 그게 ‘청년문화로 협동조합’이었습니다.

**Q. 요즘 일상은 어떠세요? 결혼도 하시고 변화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긴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아기가 생긴 건 또 다른 세계가 열린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일이란 나의 자아 실현과 목표를 하나씩 테스트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책임져야 할 한 생명이 있고 그 울타리를 잘 만들어줘야겠다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일과 어떻게 잘 병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Q. 지금도 본인을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동료들과 교류가 많아지지 않으면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동료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항상 응원하고, 이 활동에 있어서는 언제나 지지하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동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 '내가 활동가냐'고 물으면 전처럼 '맞다'고 대답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활동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Q. 정체성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구체화되는 편인가요?**

맞아요.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라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체성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면서 '엄마'라는 타이틀이 하나 생긴 거죠. 사라지지 않을 소중한 이름이요.

**Q. '하이 앤드 하우스'는 어떤 의미의 공간인가요?**

해우소가 첫발을 내디딘 곳이고, '청년문화로 협동조합'이 동료 집단이자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준 곳이라면, '하이 앤드 하우스'는 나의 역량을 더 기르고, 그 역량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계속 사람을 구체적으로 초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 좋아요. 2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부산 중구, 원도심이라는 지역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어나서부터 살았던 곳은 아니지만, 인연이 됐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곳이거든요. 지역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는 걸 느꼈고, '낙후된 동네'라는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그걸로 더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관광과 접목이 됐고, 빈집을 활용해서 커뮤니티스러운 동네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목표까지 갖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을,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만나는 일을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

사회복지법인 내원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리폼하우스

아름다운가게

CENTRAL HOTEL MARIANNE

후원 |

FLORA FOUNDATION



아름다운가게

창웅

2025년 가을 개인 의복 리폼 패션쇼

모든 길은 당신의 것

ALL Ways Are

“지금의 청년들도, 다음의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청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토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회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꿈꾸는 예비창업가

Q. 스스로를 소개한다면?

대안 없이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Q. ‘청년 활동’이란 단어를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2019년쯤이요. 당시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영리 사업 공모 관련 글들을 알아봤거든요. 그때 청년 단체라든지 청년 사업이라는 단어를 접하며 처음 알게 됐어요.

Q. 그때 활동하셨던 비영리 단체는 어디였나요?

쉐어마인드입니다.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영화 접근권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다섯 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했어요.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합쳐서요.

Q. 개인적인 미션이 있었던 건가요?

장애 당사자로서 접근성 강화 같은 것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확산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전히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Q. 장애 영역을 넘어서 청년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청년 패널조사의 연구 참여자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인터뷰 조사에 참여하려면 지역 내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을 좀 더 알고 있으면 참여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Q. 인상 깊었던 청년 활동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작년에 공간 숲에서 했던 책쓰기 프로그램이요. 각자가 주제를 정해서 자서전 형태로 쓰는 건데, 워크숍 과정으로 함께했어요. 각자가 살아온 청년의 삶 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고, 서로 응원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Q. 부산청년들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요?**

평소 청년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서, SNS를 통해서 단체를 먼저 만났어요. 그러다가 청년 패널조사 발표회에서 서원 님을 만났고, 부산청년들 교류회를 안내받아서 참여하며 시작했습니다. 아마 2023년이나 2024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Q. 활동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평상시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혼자 관심만 갖고 있다가, 선거 때 정책 공약 살펴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전세사기 같이 한창 이슈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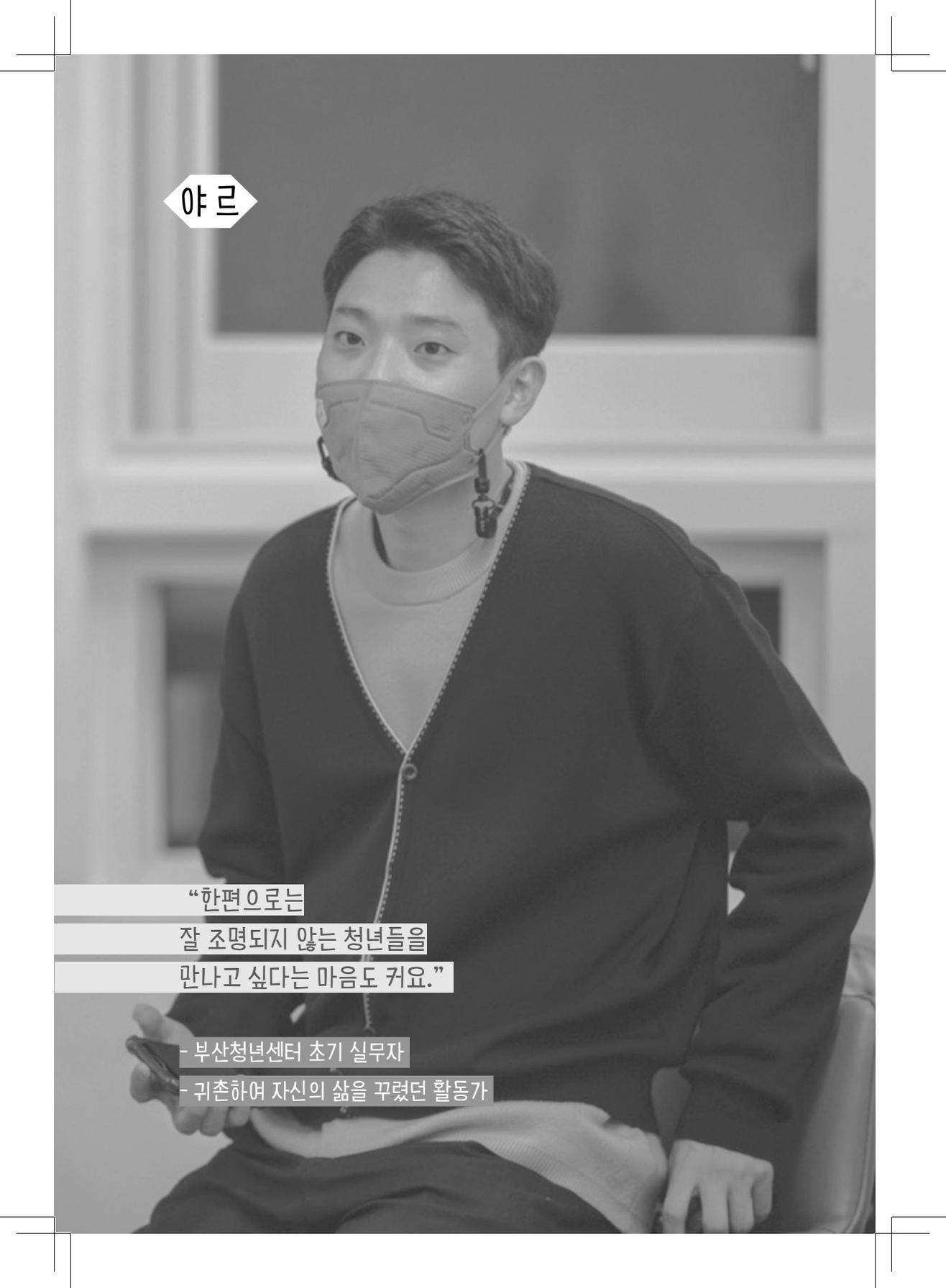
**Q. 창웅님만의 시선에서 청년 활동을 정의한다면요?**

청년 활동은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선 누군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나 다음 활동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Q. 남은 청년기 동안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요?**

지금의 청년들도, 다음의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청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토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요.





야르

“한편으로는  
잘 조명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커요.”

- 부산청년센터 초기 실무자
- 귀촌하여 자신의 삶을 꾸렸던 활동가

**Q. 청년 활동 영역과 처음 접촉한 게 언제였나요?**

2021년에 청년센터에 입사하면서였어요. 그 당시에 저의 청년기를 시작하면서 청년들과 만나서 일해보고 싶고,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실무자로 일한다는 정체성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 매니저도 하고 청년도 만나면서, 청년 활동 단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동료의 언어나 활동 궤적들을 보면서 청년 활동을 처음 감각하게 됐습니다.

**Q. 센터 입사 전에는 뭘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신앙 기반의 동아리를 했었어요. 임원을 맡으면서 청년들의 정서적 불안이 크다는 걸 느꼈고, 이걸 같이 해결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 휴학을 했는데, 바로 취업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저것 새로운 활동을 찾았어요. 친구들과 지역 문제 대토론회 대회도 준비했죠.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대안을 기획했던 경험이에요.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죠. 그때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 경로를 통해 청년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청년센터에서 만난 청년정책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는 곳인가' 싶었어요. 생



각보다 진하게 정책 기반의 활동들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서원, 조아의 강의도 듣고, 지역 탐색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왕에게도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을 통해 청년정책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Q. 그 당시에는 청년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저는 청년 활동을 다양한 책과 자료로 학습했어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던 용어들을 자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을 보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 활동이 하나의 놀이터 같다고 느꼈어요. 되게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는 정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나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 나의 경로를 만드는 것 모두가 청년 활동이라고 정의했어요.



**Q. 센터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나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어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형태를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행정의 언어가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 두 가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동행하고 싶은데, 중간 지원 조직이다 보니 행정에서 요구하는 성과도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인 청년과 만나는 일을 어떻게 성과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제가 기관의 실무자로 일하다 보니 연결감의 부재도 느꼈고요. 활동가도 아니고, 조직도 불안정하다 보니 어느 쪽에서 연속성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Q. 센터의 일 경험이 끝났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원래는 2년 정도 더 실무 경험을 해볼까 고민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나도 내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주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청년센터에서 일한 덕분에 '지역 안에 자원이 이렇게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조금 더 도시의 맥락을 알게 되었달까요. 그래서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도 해보고, 부산 남구에 있었던 '청년 월동기지'에서도 자유도가 높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Q. 센터 이후의 활동 경로를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2021년에 부산청년센터에서 일을 시작했고, 2022년에는 청년 월동기지, 구 단위 활동으로 들어갔어요. 2023년에는 다독거림이라는



청년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도 했고요. 연구 활동도 했어요. 가까운 동료들과 자원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었죠. 그러다 2024년에는 상주로 갔습니다. 농촌 공동체에서 활동했어요.

**Q. 농촌으로 간 이유가 있나요?**

좀 더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더 로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부끄럽긴 하지만, 몸으로 살아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시도했던 것도 있었지만, 좀 더 밀착형으로 내 삶의 환경을 실제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농사 경험도 하고, 마을 도서관 활동도 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경험도 했습니다.



**Q.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셨는데요. 지금은 청년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요즘은 청년 활동이 지역에 뿌리 내리는 과정 같아요. 다시 본가로 들어오고 경남과 부산을 오가면서 활동하다 보니, 모든 일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소중하고, 궁금해지고, 같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이 지역에 정착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니까, 뿌리 내리는 과정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잘 조명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커요. 이태원 참사 기록 활동을 하면서 재난 속에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있어요.



**Q. 남은 청년기 동안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단체화를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익숙한 공통 관심사인 책을 매개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요.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하는 고민도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제 동네에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진영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고, 한국어도 알려드리면서 글 쓰는 수업도 같이 해보고 있어요. 지역의 필요를 기획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해에서는 청년들보다 청소년들을 먼저 만나보려고 해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성장 과정과 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조아

“이제는  
저의 청년기를  
제대로  
이행하고 싶어요.”

-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전 이사장

3층 강당

**Q. 청년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부산문화재단의 '청년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문화기획자'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재밌어 보여서 교육을 들었죠. 교육 중에 제안서도 쓰고, 그 제안서로 몇 명 뽑아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교육에서 청년 문화가 어떤지, 피드백이 어떻다든지 이런 건 크게 배운 게 없었어요. 아쉬움을 느낄 즈음, 청년 정책, 청년 활동을 알게 됐습니다.

**Q. 부산청년들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요?**

정확한 기억은 좀 애매한데, 2019년 청년주간 때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분들이 영도에 사시는 분들, 박진명 전 이사장님, 청년문화 하시던 분들이었고, 어쨌든 부산청년들과 연결된 분들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청년 활동이라고 하는구나' 하게 됐죠.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는 게 청년 활동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Q. 그 당시에는 청년 활동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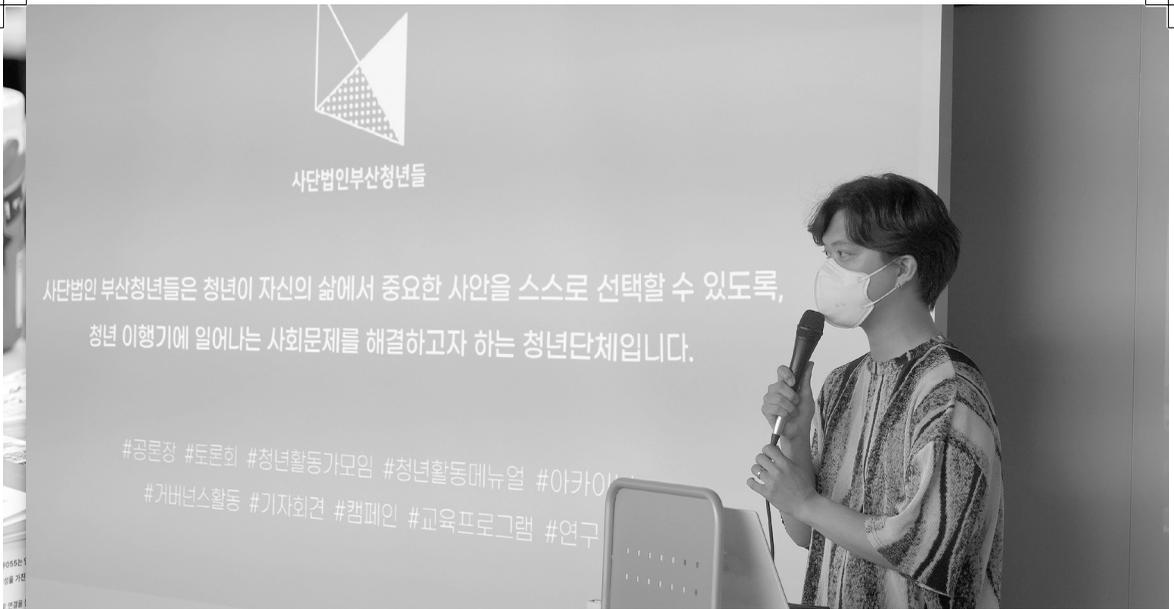
지금이랑 비슷하죠. 다만 그땐 좀 정책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싶어서 조례나 법이 정의하는 청년 활동을 찾아보고 학습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의하는 개념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정의 내리는 것도 저한테



되게 필요한 거였는데, 지금은 청년 정책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했으니까, '청년 활동'이란 말 자체가 제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Q. 청년 활동을 벗어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성향에 맞는 일이었죠. 명확한 결과물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동력이 되었죠. 정책을 살펴보는 일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어요. 오히려 문화기획처럼 추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목표를 딱 집어서 '이걸 해결해야지'라는 도전 의식이 더 잘 맞았거든요. 업무적으로 잘 맞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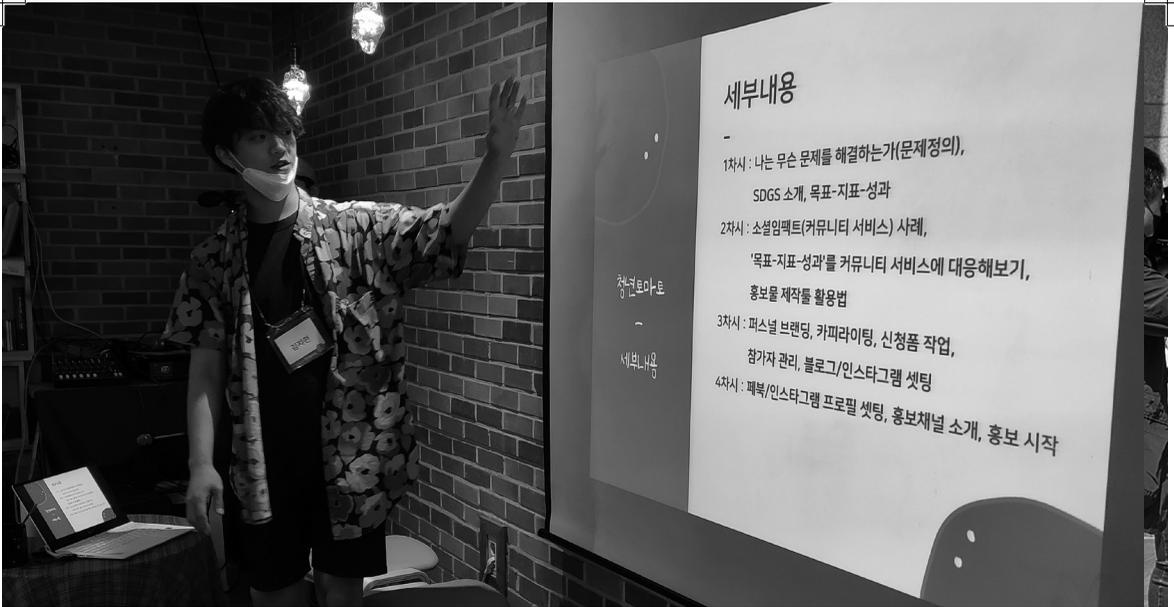


**Q.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의 이사장도 역임했습니다. 이사장까지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19년에 이사로 시작해서, 1년 정도 활동하고 이사장을 맡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내가 더 맡아서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발만 애매하게 담고 있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이야'를 물어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영도에 사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람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너무 제대로 알려줘서 이사장까지 하게 되었네요.

**Q.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아쉬움도 남나요?**

힘들었지만, 이사장을 맡아서 좋았어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엄청 과한 역량 강화를 해버렸고, 그때 그렇게 빠르게 안 했으면 오히려 청



년활동을 더 오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워서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별로 안 아쉬웠어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같은 느낌이었던거든요.

**Q. 처음부터 특정 의제에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 활동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난감했어요. 다른 동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너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떤 의제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청년 활동, 청년 정책 시작하신 분들이 의제 기반으로 하셨다 보니까, 노동 먼저 시작하신 분, 주거 관심 있으신 분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정책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프로세스가 재밌었던 거고, 참여 기구가 궁금했던 거예요. 오히려 업무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이게 일이 될 수도 있겠네' 하는 느낌으로요.



**Q. 이사장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이요. '다음 사람에게 활동의 연속성을 넘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를 부산청년들에서 제일 많이 느꼈어요. 같은 방향에 동의하면서 조금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런 동료들을 만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걸 느꼈죠. 개인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Q. 지금 본인을 청년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활동에 시간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12월에 재취업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영리 회사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론조사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여론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영리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 대충 할 인간이 아닌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지금은 따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어요. 제 경험상 활동가가 다른 일을 시작한 이후, 예전처럼 다시 돌아와서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Q. 활동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단체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우리 단체 이런 거 한다'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화도 내고,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시간을 함께 쓰면 청년활동이라고 생각해요.



**Q. 남은 청년기의 계획이 있다면요?**

이제는 저의 청년기를 제대로 이행하고 싶어요. 전업 활동가가 아니게 되면서, 청년 시기에 해야 할 것들, 가령 돈 때문에 시작한 일에서 승진도 해보고, 집 사는 데 필요한 것들도 고민해 보고요. 노후 계획 같은 걸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국민연금도 10년 채우려면 빨리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청년기를 이행하면서, 문제로 느껴지는 주제를 만나면 그걸로 다시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해요. 예전에는 일로 청년 정책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청년으로 그냥 살아보고,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게 보이면 그걸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주거 정책이든, 금융이든, 복지 쪽이든 좀 더 구체적인 의제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여론조사를 배우려는 것도 그래서예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모으는 것도 스킬인 것 같아서요. 나중에 타이밍 맞을 때, 지금 동료들이 나이 들어서 정치판도 가시고 하면, 그때 여론조사든 데이터 분석이든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싶기도 해요.



우왕

“긴 시간 고민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이사

**Q. 청년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6년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1인 캠페인 활동들을 마무리하고, 청년 고독사라는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였어요. 1인 가구 청년들과 함께 요리 대회를 하면서 청년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중요한 의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청년 세대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청년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Q. 부산청년들과는 어떻게 결합하게 되셨나요?**

청년단체 활동을 하다가 유사 사업에 지원해서 멘토링을 받게 됐고, 그때 만났던 멘토와 동시에 연결된 지역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연합 회의의 형태로 부산청년들을 처음 조직하고 결합했습니다. 그때는 법인화가 되기 이전이라 협의체, 회의체의 형태였어요. 조례라든가 청년 공간이 처음 세팅될 때, 일자리 중심의 청년 공간에 어떤 차원의 논의를 넣어야 할지 함께 대응하는 형태로 조직이 됐습니다.

**Q. 중간에 활동을 쉬었던 적도 있나요?**

네, 좀 지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의 구상에 대한 고민과 불안으로 활동을 잠시 멈췄던 때가 있어요. 그때 공백기가 있었고, 이후에 조아가 이사장이 되었을 때 협업하기 위해 이사로 다시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Q.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있나요?

처음 시작했던 단체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쳐서 중단했던 거에 대한 개인적인 부채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나보다 윗세대인 활동가들이 세팅하는 거에 동조하고,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조아가 이사장이 될 때는 나와는 또 다른 세대의 활동가가 대표성을 띄고 하는 거였고, 그렇다면 선배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앞서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것도 부채감인거죠. 다시 가입하고 이사로도 활동하게 됐습니다.

#### Q. 그때는 청년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청년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



는 걸 청년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청년 활동이라는 범위 안에서  
 도 공통된 하나의 기준이나 틀 같은 건 없었고요. 같은 세대인 청년  
 들이 활동을 한다면 그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같이 모여서 청년 활  
 동을 하는 단체들이라고 인식하고 조직했었어요.

**Q. 종종 활동에 지쳐 떠나가도 하는데요. 청년 활동이 어려운 이  
 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역과 주제  
 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전반적인 세팅을 하고 판을 만드는 사람  
 은 자신이 기획해서 판을 바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  
 을 갖기 쉽겠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니즈를 학습하고 대응하는 동행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키워드와 주제를 내 것으



로 학습하는 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뜨는 공백들이 개인 삶의 문제와 만났을 때, 더 큰 불안으로 증폭된다고 생각해요. 판을 만드는 사람은 동행자가 필요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고,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격차가 활동의 딜레마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중간 시기에 마침 개인적 삶의 불안이 커지며 쉬고 싶었던 거죠. 저부터 도망가고,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고민하는 동료의 불안과 언어가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 더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해요.

**Q.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가 있나요?**

여전히 생존과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일상 안에서 만들어진 격



차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도 많은 관심이 있는 의제예요. 부산청년  
들 활동에 저의 의제를 녹여내기에는 개인적인 여력과 체력이 뒷받  
침되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는 화두는 계속해서 구체화시키  
려고 하고 있고요. 단체 공동의 의제로 함께 논의해 보자는 제안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Q.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가장 최근 총회가 아닐까 싶어요. 2025년 초반에 했던 총회인데, 제  
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때 느낌이 좀 신선했어요. 익숙  
했던 얼굴들도 있고, 새롭게 활동에 관심을 가진 20대 청년들도 있  
고. 그 중간 세대로서 저도 예전보다는 많은 부담을 내려둔 채로 가  
볍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 이제 활동이라는 게 내가 많이 긴장  
한 채로 하지는 않는구나, 나도 조금은 힘을 빼고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총회 때 처음 받았습니다.

**Q. 지금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저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제가 걸어왔던 길의 관성에 따라 활동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활동가라고 지칭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과거와 다르게 양보하지 않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칼퇴라던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이라던가. 과거와 다르게 타협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일상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타협되지 않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Q. 활동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의 의제에 대해서 성과가 없더라도 꽤나 긴 시간 고민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남은 청년기 동안의 계획이 있다면요?**

이제 청년기가 4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우리의 지난 걸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이 흐름을 또 다른 누군가가 잘 이용하고 그들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게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어서 넘기는 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어딘가에 생계와 생존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힘으로 일상을 지탱할 수 있는 더 많은 구조를 만드는 게 남은 청년기의 목표입니다.

서원

vivastudio  
CORPORATE ROCK AND ROLL

“청년 정책이 조금 더  
청년들을 위한 형태로  
재조정되면 좋겠어요”

-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이사장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집행위원

**Q.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청년들 이사장 서원입니다. 현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집행위원회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Q. 청년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9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 관련 사업이 있었어요. 재단에서 부산에 있는 청년단체 100개를 아카이브하는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년단체들을 수집했거든요. 그런데 고3 때, 그러니까 2016-17년 즈음에 봤던 청년단체들이랑 2019년에 찾아본 청년단체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2-3년 사이에 많이 없어진 거죠. 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라지는지 물어보니까 다들 개인의 진로 문제, 부산에서 더 이상 활동을 오래 하기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던 활동 지도를 부산 청년주간 행사에서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때 부산의 청년 정책이라는 게 있고 이걸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Q. 청년 정책의 동료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위원회에 들어가서 첫 회의도 하고 정책도 들여다봤는데, 솔직히 시행 계획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을 위해 운영되는지도 모르고요. 첫 회



의에 와서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1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주고 심의 하라고 하니깐 너무 어려웠던 거죠. 조금한 마음으로 청년 정책이 도 대체 무엇인지 공부하면서 지금의 동료들을 한 분씩 만나게 됐어요.

**Q. '청년 활동가'라는 개념은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청소년 때부터 들어왔어요. 2016년쯤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대 개념으로 인지했고요. 활동할 당시에는 '본인이 겪고 있는 혹은 우리 사회에 해결이 필요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어요.

**Q. 부산청년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문턱이 높다고 느꼈어요. 청소년 때부터 다양한 청년



단체의 활동을 봤는데, 그중에서도 부산청년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 보였어요. 그전에는 라디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모여서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사람, 이런 맥락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봤거든요. 그런데 '부산청년들'은 유권자 행동 같은 것도 하고,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되게 멋진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겠다(웃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Q.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2020년 4월에 부산시 위원회 위촉장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오거돈 시장이 사퇴했어요. 그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돼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9월에 만들어졌고요. 부산에서 공동 위원장을 하고 거의 5개월 만에 중앙정부 위원회 위원도 된 거죠. 첫 회의에 갔는데 20명의 민간위원이 5시간을 토론했어요. 청년 정책 분야를 4개로



할 거냐 5개로 할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 구조를 짜는 논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자기소개 한마디하고 5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 했거든요(웃음). 공황이 와서 서울역 앞에서 주저 앉아 있었어요. 부산 시 안에서 아등바등 청년 정책이 뭔지 알아가는 시점에, 중앙정부에서 청년 정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고관여자가 되어서 논의를 했던 경험이 그때는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Q.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때 제가 이해하는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당사자들의 시선과 입장,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20



대 초반, 지역의 대학생으로서 이 정책을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 있지 않을까? 그 역할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엄청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자리에 앉히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배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들었던 말을 쉽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Q. 도망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사실 매년 도망치고 싶어요(웃음). 그럼에도 못 가는 이유는, 그래도 한 명쯤은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버티고 있어요.

**Q. 지금 스스로를 청년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3년 전, 2022년쯤까지는 활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3분의 1은 돈을 버는 직장인이고 3분의 1 정도는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에요.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오래 지속하려면 내 일상의 안정성도 높아져야 하거든요. 그 둘을 병행하는 건 점점 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 같이 청년 활동을 하자고 많이 권하지 못하겠어요.



**Q. 지금 시점에서 청년 활동을 정의한다면요?**

청년들이 청년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활동이면 다 청년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공적인 활동을 넘어서 요즘엔 이렇게 생각해요. 다양한 관심사에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이면 다 청년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넓게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양가적인 것 같아요. 나를 청년 활동가라고 정의할 때는 되게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청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넓게 봐야지 하고요.

**Q. 이사장으로서 남은 청년기의 목표가 있다면요?**

청년 정책이 조금 더 청년들을 위한 형태로 재조정되면 좋겠어요. 연령도 낮추고, 초기 사회 진입하는 청년들 혹은 반복된 이행 상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은 어떤 형태여



야 할까. 처음 사회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환대할 것인가, 기반을 잘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청년 정책 전달 체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부산청년들이 계속 목소리 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사장을 넘어서, 개인 정서원의 목표가 있다면요?**

나이가 들어도 시민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을 계속 가질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거의 전업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쌓여가는 시간만큼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정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털어내고 청년기를 끝내면 좋겠어요. 활동 과정에 힘들었던 건 다 잘 털어내고 넘어서서 청년기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제작 도모  
편집 우동준  
원고집필 정서원 우동준 이나윤 이주형  
주소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45 2층, 207-1호  
Email busanyoung2019@naver.com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꿈꾸며 아름다운재단과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은 2025공익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단행본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